

한일관계사학회 국내학술회의 제58회 전국역사학대회 자유패널 참가

일본의 패전과 한국

〈역사교육, 민중의 시점에서〉

주최 : 한일관계사학회 | 후원 : 동북아역사재단

일본의 패전과 한국 〈역사교육, 민중의 시점에서〉

일시 2015년 10월 31일(토) / 13:30~17:30

장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9동 115호

일 정	발표내용
〈제1부〉 사회 : 정광섭 (경기대)	
14:00~14:20	〈제1발표〉 敗戰 前·後의 日本 教育變化〈중학교 사회과의 연속과 단절〉 발표 : 김종식 (아주대) / 토론 : 현명철 (무학여고)
14:20~14:40	〈제2발표〉 미국의 점령과 천황의 전쟁책임 발표 : 박진우 (숙명여대) / 토론 :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14:40~15:00	〈제3발표〉 일본 패전과 한국해방에 따른 재일한인의 선택 발표 : 최영호 (영산대) / 토론 : 김태기 (호남대)
15:10~15:30	〈제4발표〉 민중의 패전의식 농촌청년 大川竹雄의 전시와 전후 발표 : 남상호 (경기대) / 토론 : 김영숙 (아주대)
15:30~15:50	〈제5발표〉 한일 양국의 한일회담 반대운동과 의의 발표 : 유지아 (경희대 한국현대사연구원) / 토론 : 이승희 (동국대)
〈제2부〉 사회 : 김민영 (군산대)	
16:00~17:30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목 차

제1발표 敗戰 前·後의 日本 教育變化〈중학교 사회과의 연속과 단절〉	7
발표 : 김종식 (아주대) / 토론 : 현명철 (무학여고)	
제2발표 미국의 점령과 천황의 전쟁책임	23
발표 : 박진우 (숙명여대) / 토론 :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제3발표 일본 패전과 한국해방에 따른 재일한인의 선택	41
발표 : 최영호 (영산대) / 토론 : 김태기 (호남대)	
제4발표 민중의 패전의식 농촌청년 大川竹雄의 전시와 전후	61
발표 : 남상호 (경기대) / 토론 : 김영숙 (아주대)	
제5발표 한일 양국의 한일회담 반대운동과 의의	73
발표 : 유지아 (경희대 한국현대사연구원) / 토론 : 이승희 (동국대)	

敗戰 前・後의 日本 教育變化
〈중학교 사회과의 연속과 단절〉

발표 : 김종식 (아주대) / 토론 : 현명철 (무학여고)

문제제기

1945년 패전을 전후로 해서 일본사회는 교육에 대한 가치와 지향점이 바뀌었다. 전쟁 이전에 교육의 기본적인 정신은 국체의 유지에 있었다. 전후에는 민주적인 시민의 양성에 교육의 가치가 주어졌다. 전전과 전후의 교육의 가치와 지향점은 단절되었다.

그러나 전전과 전후의 연속선상에서 일본의 교육을 고려해 보아야 할 점은 없겠는가? 교육의 기본적인 환경은 학생과 교사이다. 배우는 환경과 가르치는 선생님이 같다면, 연속적인 측면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연속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연속적인 측면에서 일본 교육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 일본 교육의 지향점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945년 이전에는 6년, 패전이후에는 9년의 의무교육기간이 설정되었다. 의무교육기간의 차이를 엄두에 두면서도 중학교에 해당하는 7학년에서 9학년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지는 교육, 그중에서도 국민을 양성하는 사회과 교육, 특히 역사교육에 중점을 두고 발표하고자 한다.

전전과 전후의 단절과 연속이라는 측면에서 사회과 교육, 특히 역사교육을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내용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일본정부가 교육을 위해 발행하는 학습지도요령 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패전이전의 교육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일본은 교육에서도 변화를 맞이하였다. 전쟁말기 1917년 교육의 개혁을 위해 테라우치 내각의 오카다(岡田良平) 문부대신 주도로 내각 자문기관으로 임시교육심의회를 만들었다. 심의회의 자문에 따라 초등, 중등, 대학 등 교육 전 방면에 걸친 교육개혁이 진행되었다. 특히 중학교 이상의 확충이 급속히 이루어졌다. 중등교육의 중심인 중학교는 1916년 325개교 14만 7천여명이, 1936년 559개교 35만 2천여명으로 인원이 2배이상 증가하였다.(『学制百年史』) 이러한 중등교육 인원의 증가는 중등교육의 성격을 엘리트 교육에서 고등보통교육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패전이전 중학교 교육내용의 기본적인 틀은 1931년 중학교령 개정으로 완성되었다. 그 외의 중학교 규정에서 커다란 변화는 1943년 중등학교령이 개정되어 종래의 중학교, 고등여학교, 실업학교를 중등학교로 통일시켰다는 것이었다.

전전 교육, 특히 역사교육의 방향성은 1931년 중학교령의 「중학교령시행규칙」 개정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하는 전쟁에 돌입하면서 일부의 변경은 있었지만 기본적인 교육의 방향성은 바뀌지 않은 채 1945년 패전을 맞이하였다.

1931년 중학교령의 역사교육을 살펴보겠다. 문부성령 제2호(1931년 1월 10일)의 「중학교령시행규칙」 개정이 이루어졌다. 역사는 국사, 동양사, 서양사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은 역사에 대한 규정에 잘 드러나 있었다.

「제8조 역사는 역사상의 중요한 사적을 알게 하여 사회의 변천, 문화진전의 과정, 우리나라 성쇠의 이유를 이해시키고 특히 우리 국운 진전을 흔적을 상세히 하여 건국의 본의와 국체의 비교할수 없는 존엄의 이유를 알게 하여 대의명분을 명확히 하여 국민정신을 함양할 것에 중점을 둔다」(「중학교령시행규칙」 문부성령 제2호(1931년 1월 10일))

일본의 역사적 사적, 사회의 변천, 문화의 진행 과정, 성쇠를 “건국의 본의”와 “국체의 존엄”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여, 그러한 관점에서 국민의 양성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국사’(일본사)와 외국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통해 내용의 일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사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주의」

국사를 가르치는 것은 특히 우리 국체의 특이한 이유 및 대의명분을 명확히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쓸모없게 사실의 천착으로 흘러 그 요점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주의」(국사 부문) 「중학교교수(教授)요목」 문부성훈령 제5호(1931년2월 7일))

국사 교육에서는 국체에 중점을 둔 교육, 국체의 특수성 “국체의 특이한 이유 및 대의명분”을 명확히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또한 문화 교육은 일본을 중심으로 외국문화의 취사선택과 외국문화에 대한 비판 종합을 하도록 하였다.

역사에서 국사와 함께 외국사에 대한 교육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었다. 외국사는 기본적으로 일본사와의 관계에서 다루도록 지시하고 있었다. 동양사는

일본과의 직접적으로, 중대하게 관련된 사실과 인물을 중심으로 교육하도록 하였다. 그 외의 부분은 단순하게 교육하도록 하였다. 서양사는 근세 이후를 중심으로 다루고 일본과의 직접적인 관계, 세계대세의 흐름에 중심을 두고 있었다. 특히 서양 국가의 국체와 국민성의 상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하도록 하였다. 서양의 근대 민주주의 국가와의 차이를 강하게 의식하고 있으며 그것에 대하여 교육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였다.

공민과의 경우도 중학교령시행규칙개정의 공민과 교육요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제6조 공민과는 국민의 정치생활, 경제생활 및 사회생활을 수행하는데 충분한 지덕(知德)을 함양하고, 특히 준법의 정신과 공존공영의 본의(本義)를 터득하며, 공공을 위한 봉사와 협동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풍을 양성하여, 선량한 입헌자치의 민으로서의 소질을 육성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공민과는 헌정자치의 본의를 명확히 하여 일상생활에 적절한 법제상, 경제상 및 사회상의 사항을 가르쳐야 한다」(1931년1월10日公布(省令第二号)「中学校令施行規則改正」)

기존의 「법제경제」의 과목을 개량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1920년대 다이쇼데모크라시의 활성화에 따라 입헌정치를 구현하는 일본 국민의 정치 참여에 조응하는 교과목으로 설치되었다.

문부성령 제2호(1931년 1월 10일)의 「중학교령시행규칙」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시간표는 다음과 같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기본과목	공민과				2(70)	2(70)
	역사	3(105)	3(105)	3(105)	3(105)	3(105)
	지리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과 더불어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 내각은 전쟁 수행을 위한 국가 총력전체제를 확립하였다. 같은 해 12월에 내각 직속의 자문기관으로 교육심의회를 설치하여 1941년까지 교육제도 등 교육 전반에 걸친 변화를 이끌었다. 소학교는 1941년 국민학교로 개편하고 초등과와 고등과를 편제하였다. 교과 편성도 초등과는 국민과, 이수과, 체련과, 예능과로, 고등과는 여기에 실업과를 추가하였다. 국민과 속에 수산, 국어, 지리, 역사가 과목으로 설치되었다. 교육은 황민 단련이라는 목표로 모아졌다. 교육

방법은 지식중심의 교육에 빠지지 않고, 심신일체의 교육을 지시하였다. 의례와 행사를 중시하고 이것을 교과 수업과 합쳐서 효과를 올리도록 하였다. 또한 학교에서 훈련의 방법을 중시하고, 단체훈련에 의한 단련 방법을 장려하였다.

중등학교의 제도개혁은 1939년 9월 답신으로 새로운 중등학교 제도를 만들었다. 종래의 중등교육기관으로 발전했던 중학교, 고등여학교, 실업학교를 하나의 중등학교체계로 정리하는 방침이었다. 이러한 학교의 제2학년이하에서는 상호 전학의 길을 열도록 하였다. 이것에 따라 1943년 1월에 「중학교령」이 공포되었다. 그러나 전시하의 상황에서 제도는 시행되지 않았다. 전후와의 연관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다.

중등학교도 초등학교와 같은 기본방침에서 교과목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중등학교 공통교과로 국민과, 이수과, 체련과, 예능과, 외국어과, 그 외에 가정과, 실업과도 추가되었다. 국민과는 초등학교와 같이 수신, 국어, 지리, 역사가 과목으로 설치되었다. 특이점은 교과교육 이외에 ‘수련(修練)’이 추가된 것이다. 교과와 수련을 합쳐서 교육내용 및 방법을 개선하려고 하였다. 수련은 종래 없었던 교육분야이다. 수련을 설치한 의도는 행동적 수련(行的修練)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천적·종합적으로 발전시켜, 교과와 합쳐서 하나가 되어, 진중보국의 정신을 발양시켜 헌신·봉공·실천력을 키우려고 하였다. 수련은 전시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독특한 내용편성이었다. 또한 사상형성에서 중요한 교과목인 수신, 공민, 역사에 대하여 문부성은 직접 저작 출판하는 국정제로 하였다.(『学制百年史』, 「五戰時下の教育」) 교육 내용에서 중학교 공민과와 역사과는 천황제를 옹위(“건국의 본의”와 “국체의 존엄”)하는 국민의 양성을 지향하였고, 일본 중심적인 교육이 수행되었다.

2. 패전직후의 학습지도요령

패전이후 교육에 관한 전후개혁은 1947년 교육기본법과 학교교육법의 성립으로 시작되었다.

교육기본법의 제1조 교육의 목적은 전후 일본이 교육을 통해 양성하려는 인재상을 명쾌하게 드러내고 있다.

「교육은 인격의 완성을 지향하며, 평화적인 국가 및 사회의 형성자로서, 진리와 정의를 사랑하고,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며, 노동과 책임을 중시하여, 자주적 정신에 충만하여 심신 모두 건강한 국민 육성을 기하여 행해져야 한다」(昭和22年3月31日法律第25号)

교육의 목적은 인격을 완성과 더불어 ‘평화적인 국가 및 사회의 형성자’에 두고 있다. 전쟁을 하지 않을 국민의 양성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의 가치 존중과 ‘자주적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문부성은 전후 민주주의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시도로 미국식의 교육스타일을 참고로 교과과정의 기준이 되는 학습지도요령을 발행하였다. 1947년 발족한 새로운 제도는 학교 체계와 교육내용에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1) 学習指導要領 一般編 (試案) 昭和二十二年度 文部省

이 시기에는 민주적 국민 양성을 위해 정해진 형식의 교육을 지역사회와 학교 아동의 특성에 맞는 교육 내용과 방법으로 바꾸었다. 이것은 민주적인 국민으로 키우는 교육틀이었다. 이것을 구현하는 학습지도요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학습지도요령)책은 학습의 지도에 대하여 기술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지금까지의 교사용도서와 같이 하나의 정해진 길을 정하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새롭게 아동의 요구와 사회의 요구에 응해서 만들어진 교과과정을 어떻게 해서 활용해 갈 것인가를 교사 자신이 스스로 연구하여 가는 안내서로서 쓰여진 것이다.」

학습지도요령은 교육에 있어서 중앙집권적 획일적 성격을 벗어나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 제작되었다. 또한 요령은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않은 교사의 연구 안내서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사회과 교육과정도 바뀌었다. 종래의 수신, 공민, 지리, 역사가 없애고 새롭게 사회과를 두었다. 교과 내용을 융합하여, 하나로 해서 가르쳐야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국사는 독립적인 과목으로 두었다.

중학교 1, 2, 3학년의 시간수는 아래와 같다. 사회과와 국사는 필수과목이다.

社 会	175 (5)	140 (4)	140 (4)
国 史		35 (1)	70 (2)

패전이전과 달라진 교과목은 ‘자유연구’라는 교과목이 신설된 것이다. 그 성격은 ‘개성’의 신장을 지향하는 것으로 그 성격은

「학년의 구별없이 동호인의 모임으로, 교사의 지도하에 상급생의 지도도 받고, 함께 하는 클럽조직으로 운영한다. 아동이 학교와 학급의 전체에 대하여 부담할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시간에 사용할 수도 있다」

선택과목으로 설치되었고, 시간은 큰 틀에서 정해놓고 각 학교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또한 내용에서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래는 1, 2, 3학년의 시간수이다.

自由 研究	35-140 (1-4)	35-140 (1-4)	35-140 (1-4)
-------	-----------------	-----------------	-----------------

2) 學習指導要領社会科編 1947

전전에 대한 사회과 교육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새로운 사회과의 성격을 잡아가고 있었다.

「기존의 우리나라의 교육, 특히 수신(修身)과 역사, 지리 등의 교육에서 보인 가장 큰 단점은 사실, 또한 사실과 사실과의 관계 등을 제대로 파악하려고하는 청소년 자신의 생각이나 생각하는 힘을 존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한 것이다. 이것은 지금 충분히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종래에도 수신(修身)·공민·지리·역사·실업 등의 과목은 (중략) 청소년의 사회적 경험 자체를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지 않고, 자칫 윤리학·법학·경제학·지리학·역사학 등의 지식을 청소년에게 주입시키는 것에 급급하였다. 따라서 이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사회생활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얻었지만, 그것이 하나로 통일되어 실제 생활에 활용되는 일은 없었던 것이다. (중략) 사회과는 이른바 학문의 계통에 관계없이 청소년의 현실 생활의 문제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사회적 경험을 넓히고 또한 심화하려는 것이다.」

전전 사회과 교육, 즉 천황의 국체를 옹호하는 신민교육은 다른 사람의 견해를 수용하는 수동적인 것이었고, 경험보다는 지식 주입에 급급하였다. 전후 사회과는 현실 생활에 근거한 교육과 청소년의 경험을 확장·심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사회과 교육에서 민주주의 사회와 생활의 근거는 전통의 무조건적 존중이 아닌, 단절과 계승이었다. 이러한 민주주의 사회의 기저에 존재하는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궁극적으로 생활 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는 일상생활의 실천에 의해서만 이해, 체득되는 것이었다. 때문에 청소년의 생활 문제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그 해결을 위한 활동을 지도해 가는 사회과 학습지도법이 강조되었다.

3) 學習指導要領社會科編(第七學年—第十學年) 1947년 6월

중학교 사회과에서 일상생활의 실천을 중시하기 때문에 교과교육에서도

「지금까지 사회과의 내용이 되고 있던 역사·지리·공민 등은 모두 별도의 교과로 다루어 왔지만, (중략) 학생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러한 학습 내용을 몇 개의 큰 문제로 종합하였기 때문에, 교과 자체의 내용에 따라 계통을 세우는 것과 같은 것은 그만 두기로 하였다.」

사회과는 학생의 경험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역사, 지리, 공민으로 분리하지 않고 학습 내용을 몇 개의 커다란 문제로 종합하였다. 이것은 교과 내용을 계통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뜻이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교육방법은 무엇인가?

「학생들이 하나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존의 각 교과의 학습 내용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그 교과의 구획에 얽매이지 않고, 교과에서 취급 한 적이 있던 사회생활에 관한 것이라면, 모든 것을 모아서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다.(중략) 학생들이 자신의 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여러 교과의 교재가 종합되고, 융합되어야만 하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일반사회과는 종합사회과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사회과의 목표를 사회문제의 해결에 두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식뿐만 아니라 경험을 중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여러 교과의 융합적인 시점을 중시하였다. 예를 들면 ‘공업시대’는 그 역사적·지리적·경제적·사회적 여러 측면의 상호 관련에서 학습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이 ‘사회과학습의 특색이고 따라서 학습지도의 특이성’이라고 말하고 있다.

경험과 융합의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교재(신문, 잡지, 영화, 사진 등)를 사용하기도 하고, 중학교 각 학년에는 6개의 단원이 주어지는데, 총시간을 기계적으로 할당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사회과를 운용할 계획을 세웠다.

3. 학습지도요령의 변화

1) 学習指導要領一般編(試案) 昭和26年(1951년 7월) 改訂版 文部省

서론에서 학습지도요령은 교사에게 시사를 주기 위한 것으로, 교육을 획일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기하였다.

일본사는 사회과의 국사와는 분리되어 있다가, 사회과의 일부로 2-3학년에 편성되었다. 일본사는 독립교과가 아닌 사회과의 일부이며 시간 배당도 사회과의 일부로서 각 학교 자율에 맡겼다. 각 학교는 필요에 따라 어느 학년에 적당한 시간을 두거나, 혹은 이들을 위해 특정 시간을 마련하지 않고 사회과에 융합하여 학습시킬 계획을 세울 수도 있었다.

시간배정은 1949년 5월, 12월에 개정되었고, 1951년 4월에 개정되었다. 사회과의 시간배정은 아래와 같다.

学年 教科		1	2	3
必修教科	社会	140~210	140~280	175~315
小計		910~1015	910~1015	910~1015

또한 사회과에서 도덕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구체적인 것은 문부성에서 발행할 「아동·생도가 도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도가 필요한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종래 ‘자유연구’라는 명칭은 폐지되고 ‘특별교육활동’이 설치되었다. 성격의 축소로 그 활동영역은 학급자치회(ホームルーム), 생도회, 클럽활동, 생도모임 등으로 한정되었다.

2) 中学校高等学校学習指導要領 社会科編 - I 中等社会科とその指導法

(1951년12월)文部省

사회과 교육의 오해와 혼란(성격에 관한 해석 차이)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첫째 지리, 역사, 공민을 분리하지 않고 조직하는 것, 둘째 학습활동의 형식으로 토의, 보고, 견학, 면접에 두는 것, 셋째 많은 교과를 구별하지 않고 필요한 학습내용을 얻는 것에 두고

있는 점을 들었다. 사회과 교육의 다양한 관점을 학습지도요령에 나열하였다. 이것은 사회과 교육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회과의 문제점은 일본사에 대해서도 드러났다. 사회과와 별개로 일본사를 편성하는 것에 대하여 승인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학교 사회과에서 일본사가 따로 마련되어도 좋은 것으로 되어있는 것은 모순처럼 보인다. 사실 일본사를 일반사회과와 별개로 편성해야한다는 적극적인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 과거의 일본사가 극단적인 일본중심주의 사상의 양성에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자기나라의 역사에 대해 이런 치우친 사고방식을 가르쳤다는 것은 일본 교육의 불행이었다. 그래서 적어도 의무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일본의 현대 사회의 역사적 배경을 오류없이 이해시키고 싶다는 점에서 별도로 편성해도 좋을 것이다.」

사회과에서 일본사를 별개 편성할 적극적 이유는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일본사는 전전의 극단적인 일본중심주의 사상의 반성으로, 일본 현대사회의 역사적 배경을 오류없이 이해시키기 위해서 별도 편성을 승인하였다. 일본사는 중학 사회과에서 따로 편성되는 것을 인정받았다. 결국 사회과는 각 분야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독립편성이 승인되었다. 이것은 중학 사회과의 틀을 변경하는 것이었다. 전전의 개별적, 계통적인 교육을 전후의 종합적, 융합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전후의 빠른 시기부터 좌절되는 양상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회과에 기존의 '수신과'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습영역의 측면에서 사회과에서 도덕교육(수신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3) 中学校 高等学校 学習指導要領：昭和26年（1951）改訂版 昭和27年

10月20日

社会科編 II 一般社会科（中学1年－高等学校1年，中学校日本史を含む）（試案）

중학교 일본사는 일반사회과와 별개로 지도계획을 세울 적극적 이유는 없다는 점을 적시하면서, 구체적인 일본사로서의 지도계획의 예시하였다. 또한 「중학교 일본사의 특수목표」에 따른 「중학교 일본사 참고 단원 제목 예」를 (A), (B), (C)의 세가지 안을 제시하였다. 사회과 내에서 일본사의 특수성, 독자성이 구체화되었다.

4. 변화의 한계

中学校学習指導要領 昭和33年(1958)改訂版 (1958年10月刊)

일본사회에 학력저하가 문제시되고 덩달아 경제계도 기존교육에 대한 전환을 요구하였다. 중학교에서 수학과 이과의 지도시간이 증가하고, 학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통적인 학습체계가 정비되었다. 주입식(詰め込み)교육으로 비판받은 조류가 이 학습지도요령에 의해 성립되었다. 한편 1958년 8월 학교교육법시행규칙의 일부 개정하여 학습지도요령의 구속성에 법적인 근거를 부여하였다.

중학교 사회과에서는 제1학년에 지리적 분야, 제2학년에 역사적 분야, 제3학년에 정치·경제·사회적 분야에 대하여 각각 학습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독립과목으로서의 일본사는 소멸하였다.

또한 교육과정표의 표기도 유연성을 가진 51년판의 형성에서 각 교과목의 최저수업시수를 규정하는 형태로 수정, 학교의 특색을 내기 어렵게 되었다.

区 分		第 1 学年	第 2 学年	第 3 学年
必修教科	社会	140(4)	175(5)	140(4)

그리고 ‘도덕’시간의 신설이다. 교육과정심의회는 답신에는 기초학력, 과학기술교육과 함께 도덕 중시가 포함되어 있었다. 답신을 반영하여 소·중학교에 ‘도덕’ 시간이 만들어져 전 학년에 주 1시간 실시하도록 하였다.

결론을 대신하여

전전과 전후의 교육에 대한 기본정신은 국체유지와 민주적 국민양성이라는 명백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교육방식이라는 측면에서 전전의 교육관련 규칙은 국가통제의 방편이었지만, 패전후 초기의 학습지도요령은 안내서이고, 1958년도 학습지도요령부터는 다시 법적 구속력을 지닌 것으로 변화하였다. 결국 교육방식은 전전의 방식으로 돌

아가는 양상을 보였다.

전전의 사회과 교육은 주입식이며, 수동적이고, 계통적인 이루어졌지만 전후 사회과 교육은 민주적 국민양성을 위해 학생의 능동적 학습참여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융합적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체계적인 교육방식의 미확립과 학력저하 문제, 경제계의 요구 등 현실적 문제가 결합되어 전전의 계통적, 주입식 교육으로 복귀하였다.

전전의 역사, 지리, 공민이 분리되어 있었지만, 전후 ‘사회과’로 통합되었다. 일본사(국사)는 1947년도 학습지도요령까지는 독립과목으로, 1951년도 학습지도요령에서도 일본사의 독립은 소극적인 승인으로 바뀌었다. 1958년도 학습지도요령에서는 사회과로 통합되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각각 학습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독립 과목화 되었다. 즉 사회과는 형식적 통합과 실제적 분리의 교육과정을 만들었다.

전전의 전시하에 전쟁수행을 위한 교육과 실천을 위하여 새로운 교과교육으로 ‘수련(修練)’이 추가되었다. 전후에는 민주적인 시민의 양성을 위해 ‘자유연구’가 만들어졌다. 이후 자유연구는 ‘특별교육활동’으로 축소되었다. 한편 도덕교육이 점차 강조되었고, 1958년에는 ‘도덕’ 교과에 부활로 이어졌다.

결국 역사를 포함한 사회과 교육은 교육방식에서는 전전과 전후의 연속성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文部省 『学制百年史』

「中学校令施行規則」(昭和5年1月10日)

「学習指導要領 一般編」(試案) 昭和二十二年度 文部省

「学習指導要領社会科編」1947

「学習指導要領社会科編(第七学年—第十学年)」1947年6月

「学習指導要領一般編」(試案) 昭和26年(1951年7月)改訂版 文部省

「中学校高等学校学習指導要領 社会科編-I 中等社会科とその指導法」(1951年12月) 文部省

「中学校高等学校学習指導要領: 昭和26年(1951)改訂版」, 社会科編 II 一般社会科(中学1年—高等学校1年, 中学校日本史を含む)(試案) 昭和27年10月20日

「中学校学習指導要領」 昭和33年(1958)改訂版 (1958年10月刊)

野崎 剛毅, 「学習指導要領の歴史と教育意識」, 『國學院短期大学紀要』23, 2006년

윤종혁, 『근대 이후 한국과 일본의 학제 변천 과정 비교연구』, 한국학술정보, 2008.

한용진, 『근대 이후 일본의 교육』, 도서출판 문, 2010.

「패전 전·후 일본의 교육 변화 - 중학교 사회과의 연속과 단절」 토론문

현명철 (무학여고)

◎ 발표의 의의

1. 오늘날 일본 교육의 지향점을 이해하기 위해 패전 전후 일본 교육의 연속적인 측면을 살펴보자는 문제 제기는 참신하다.
2. 패전 이전의 교육과 패전 이후의 교육을 요령 있게 함축적으로 잘 정리하였다.

◎ 문제점

1. 문제제기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연속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9쪽 6행)고 하였는데, 정책적인 측면에서 연속이 나타났는지 발표에서 구체적·실증적으로 제시되지 못하였다. 어떤 모습으로 잠복되었다가 어느 시기에 무엇을 계기로 나타난다는 관점도 필요하다.
2. 58년 학습지도 요령에 주목하고 있는데(18쪽 이하) 타당하다. 그러나 58년도 학습지도요령부터 법적 구속력을 지닌 것으로 변화되었다고 파악함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미약하다. 당시 냉전의 격화됨에 따라 미국이 일본의 주권을 회복시켜주고 일본의 역할을 요구함에 따라 생겨난 ‘역코스’의 흐름과 연관지어 58년도 학습지도요령을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학력저하가 문제가 되고 덩달아 경제계도 기존 교육에 대한 전환을 요구하였다’
→표면적 이유와 본심이 무엇이었는가.
→일본이 주권을 회복함으로써 추구하고자 하였던 것이 무엇인가.
3. 이상의 문제점을 해소해 준다면 발표자의 문제의식과 일치하는 좋은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됨.

미국의 점령과 천황의 전쟁책임

발표 : 박진우 (숙명여대) / 토론 :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1. ‘평화주의자’ 천황의 원형 ‘일본계획(Japan plan)’

미국이 일본과의 전쟁에서 천황·천황제의 이용 방침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료에 의하면 개전 후 불과 반년이 지난 1942년 6월의 단계에서였다. 종래에는 1942년 11월 미국무성 고문 혼백의 각서가 가장 빠른 사례¹⁾로 알려졌지만, 2000년에 후지타니 다카시가 워싱턴 교외의 국립공문서관에서 라이샤워 각서를 발견하면서 이보다 빠른 1942년 9월의 단계에서 천황제 이용이라는 문제가 검토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각서에서 라이샤워는 9월 육군성 관계자에게 “전쟁 종결 후의 이데올로기 투쟁에서 귀중한 아군, 또는 괴뢰(puppet)로서 도움이 되도록 천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전쟁에서 천황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제안하고 있다.²⁾

이후 2004년 가토 테츠로(加藤哲郎)는 같은 국립공문서관에 있는 전략정보국(Office of Strategic Services, 약칭 OSS, CIA의 전신)의 기밀문서 ‘일본계획(Japan plan)’이 라이샤워 각서보다 3개월 앞선 1942년 6월의 단계에서 “일본의 천황을, 신중하게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평화의 심벌**로서 이용할 것”(강조-인용자)이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³⁾ 여기서 가토는 일본인 연구자들의 점령사 연구가 때로는 미국 측의 자료공개 수준에 좌우되거나 또는 공식적인 미국무성의 외교자료집(FRUS)이나 점령군 GHQ자료에서의 천황론에 집중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전략정보국의 조사분석부(R&A : Research and Analysis Branch) 극동과의 문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⁴⁾

그만큼 전략정보국의 문서가 미국의 천황제 이용방침의 실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말이다. 이미 앞 장에서도 보았듯이 1991년에 천황의 ‘독백록’과 함께 데라사키 히데나리의 일기⁵⁾가 공개되면서 미국의 점령 정책에서 천황의 전쟁책임 면책 및

1) 「ホーンベックの極東課宛覚書」(中村政則・山極晃編, 『史料日本占領Ⅰ・天皇制』, 大月書店, 1990).

2) 타카시·フジタニ, 「新史料発見 ライシャワー元米国大使の傀儡天皇制構想」, 『世界』, 2000. 3.

3) 加藤哲郎, 「1942年6月米国 ‘日本プラン’と象徴天皇制」, 『世界』, 2004. 12. 원문은 “To use the Japanese Emperor(with caution and not by name) as a peace symbol”로 되어 있다. 또한 ‘일본계획’에 대한 맥아더의 1942년 8월 5일자 메모가 발견되면서 맥아더가 이 문서를 읽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4) 加藤哲郎, 『象徴天皇制の起源 : アメリカの心理戦「日本計画」』, 平凡社新書, 2005, 238~239쪽.

천황제 온존과 관련하여 맥아더의 군사비서 보너 펠러스가 핵심적인 인물로 주목을 모았다. 그는 일본문화에 심취하여 1922년부터 일본을 다섯 차례 방문한 적이 있으며 전후에는 일본인 지인들과의 인맥관계를 심분 발휘하여 천황면책 공작을 전개한 막후 인물이었다.⁶⁾ 히가시노 마고토(東野真)는 맥아더기념관과 후버연구소 등에 소장되어 있는 방대한 양의 ‘펠러스 문서’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펠러스가 막후에서 천황 면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⁷⁾

가토 데즈로는 이러한 기존의 연구에 더하여 최근 기밀 해제된 전략정보국 문서를 정밀하게 검토한 결과 펠러스가 맥아더 사령부로 부임하기 직전까지 전략정보국의 ‘심장’에 해당하는 심리작전본부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1943년에는 전략정보국 심리전 계획 그룹의 멤버 리스트에 네 번째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펠러스가 맥아더의 천황관에 따라 천황의 면책을 도운 것이 아니라 전략정보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의 기정방침을 맥아더에게 충실하게 실행시켰다는 것이다.⁸⁾ 물론 가토가 발견한 사료와 연구는 기존의 연구를 한층 뒷받침하는 것이지 여기에 반론을 제기한 것은 아니다. 미국이 일본 점령의 효용성을 위해 천황을 면책하고 천황제를 이용했다는 사실은 이미 점령기 천황제에 관한 연구에서 반론하기 어려운 통설이 되었다.

나카무라 마사노리는 천황 면책에서 상징천황제에 이르는 길은 수단계의 우여곡절이 있으며, 가토가 발견한 문서가 전후 천황제 존속에 직결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한다.⁹⁾ 그러나 천황을 ‘평화의 심벌’로 이용한다는 방침이 미국의 점령정책에 활용되고 전후 일본에서 천황제 = 평화주의, 히로히토 = 평화주의자라는 등식의 신화가 정착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인 것이다.

5) 寺崎英成, 『昭和天皇独白録 寺崎英成・御用掛日記』, 文芸春秋, 1991.

6) 펠러스와 일본인 지인과의 인맥관계에 관해서는 高橋紘・鈴木邦彦, 『天皇家の密使たち』, 徳間書店, 1985 참조.

7) 東野真, 『昭和天皇二つの独白録』, NHK出版, 1998.

8) 앞의 책, 『象徴天皇制の起源：アメリカの心理戦「日本計画」』, 238쪽.

9) 「天皇を平和の象徴に 米國機密文書で利用」, 『共同通信』2004.11.7.

2. 대일점령정책에서의 천황제 논의

미국은 1942년 8월부터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내다보고 국무성 내에 동아시아정책연구그룹을 설치하여 전쟁 종결 후의 대일점령정책을 안출했으며 그 내용은 1943년 10월 설치된 부국간극동지역위원회(部局間極東地域委員會, Inter-Divisional Area Committee in the Far East, 약칭 IDACFE)에서 검토·승인된 후 국가 및 지역위원회(Country and Area Committee, 약칭 CAC)문서가 되었다. 그리고 1944년 2월 설치된 전후계획위원회(Committee on Post-War Programs, 약칭 PWC : 국무장관, 국무차관, 보조 비서관으로 구성)에서 CAC문서에 정치적 검토를 가한 것이 PWC문서가 되었다. 이후 같은 해 12월에 설치된 국무·육군·해군 3성 조정위원회(State-War-Navy Coordinating Committee, 약칭 SWNCC)에서 PWC문서를 군사 면에서 검토·조정하여 대일정책에 최종적인 정책문서가 되었다. 그리고 1945년 1월 SWNCC의 하부구조로 극동소위원회(Subcommittee for the Far-East, 약칭 SFE)가 설치된 이후 대일정책에 관한 모든 기초업무는 SFE에 위임되어 SFE문서가 되었으며 천황제에 관한 실제 기초는 CAC, PWC문서를 참고로 SFE에서 임명된 작업그룹이 기초한 후 검토와 승인을 거쳐 SWNCC 문서가 되었다. 일본이 패전 한 후에는 SWNCC문서가 결정되기 전에 합동인사위원회의 협력과 통합전략조사위원회(Joint Strategic Survey Committee, 약칭 JSC)로부터 사전에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다. 점령군 총사령관 맥아더의 의견청취도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천황제 문제에 관해서는 더욱 그러했다.¹⁰⁾

이와 같이 일찍부터 대일점령정책이 논의되는 가운데 천황제에 관해서는 심리작전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크게 두 가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었다. 그 하나는 일본 항복 후 천황제를 폐지하고 천황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며 또 하나는 천황제를 존속시키고 이를 점령 목적에 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천황제 폐지와 천황 처벌의 주장은 당시 미국의 국민여론과도 합치하고 있었다. 1945년 6월 미국의 갤럽조사에 의하면 천황 히로히토의 취급에 관하여 처형이 33%로 가장 많으며 재판으로 결정이 17%, 추방이 9%로 이를 합하면 59%였다. 이에 비하여 천황은 군부의 도구이므로 처벌하지 않는다가 4%,

10) 竹前榮治, 「象徴天皇制への軌跡」, 『中央公論』, 1975, 3.

천황을 괴뢰로 이용해야 한다는 입장은 3%에 지나지 않았다.¹¹⁾ 천황제에 관해서도 같은 해 8월에 전국여론조사센터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일본 항복 후 천황제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천황제 폐지’가 66%, ‘일본인의 의사에 맡긴다’는 26%에 지나지 않았다.¹²⁾

한편 천황제를 존속시키고 점령 목적에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른바 ‘지일파’로 불리는 그룹에 의해 제기되고 있었다. 국무성 특별조사부 극동반원 코빌은 라이샤위의 경우와 같이 일찍부터 천황제 존속은 연합국의 항구적 이익에 유리하다고 보고 천황제를 폐지하거나 천황을 배제할 경우 일본국민의 반발과 비협력으로 인하여 질서유지가 곤란하며 반란과 보복을 유발하는 영속적인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¹³⁾

‘지일파’가 천황제 이용을 주장한 배경에는 점령 코스트의 삭감이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즉 천황·천황제를 안정요소와 변혁 수단의 잠재적 자산으로 보고, 이를 제거할 경우 무기한 점령이 필요하게 되므로 효과적인 점령 행정을 필요로 하는 천황제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단지 그들은 천황제를 전전과 같은 형태로 존속시킬 것을 주장한 것이 아니었다. 코빌은 일찍부터 군부의 재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천황의 지위를 수정하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내다보았다.¹⁴⁾ 그들은 군부와 천황제의 결합이 가져오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미국에서 ‘지일파’는 소수파에 불과했으며 미국의 여론은 그들을 유화주의자로 비난하고 있었다.¹⁵⁾ 특히 ‘지일파’의 천황제 이용론은 1944년 4월부터 PWC에서 공방과 수정을 거듭하고 있었다. 국무성 고위 간부들의 ‘지일파’ 원안에 대한 주된 비판점은 천황제와 침략전쟁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 점령기간 중 편의상 천황제를 이용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일본의 민주적 변혁이라는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점, 일본인 관료의 협력을 얻기 위해 천황제를 이용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점령군에 협력할 것이라는 점, 중국과 미국 내의 천황제 폐지의 여론을 중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이었다.¹⁶⁾

11) *Washington Post*, 1945. 6. 29. 당시 조사에 의하면 일본 천황의 이름을 알고 있는 미국인은 54%에 지나지 않았다(武田清子, 『天皇観の相剋』, 岩波書店, 1978, 21쪽).

12) 앞의 책, 『昭和天皇二つの独白録』, 22쪽

13) 1943년 3월 4일. 앞의 책, 『資料日本占領 I・天皇制』, 17쪽.

14) 위의 책, 23쪽(1943년 5월 25일 영토소위원회 문서).

15) 三谷太一郎, 「米国東アジア外交における中国派と日本派」, 『環』 8, 2002, 冬.

다만 국무성의 지일과가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장을 고집했던 배경에는 독일과 다른 사정이 있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의 유럽 문제에 관해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미국의 대통령이 일본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여유가 없었으며 정부 고관 가운데 일본에 관한 지식을 가진 자는 거의 없었다. 전시 중 일본 연구자들 가운데 일본어가 가능한 외교관은 유진 도우먼, 조셉 발렌타인 등 5명의 실무진에 불과했다. 따라서 대일 정책에 관한 플랜은 장기간에 걸쳐 하부의 일본전문가에게 위임되고 있었으며 지일과는 일본에 관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었다. 국무성 고위 간부의 압도적 다수가 천황제에 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지일과의 보고서에 거듭해서 수정 지시를 내리면서도 직무명령을 내리지 못한 것도 일본과가 정보를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¹⁷⁾

천황제 존치를 둘러싸고 PWC에서 공방이 거듭되는 가운데 1944년의 단계까지도 하나의 통일된 견해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천황제와 군부의 결합이 가지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찬반 모두 천황제 문제의 전제인식이 되고 있었다. 또한 일본의 항복과 점령행정이라는 단기 과제에 관해서는 코스트 삭감의 필요에서 천황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지만 그렇다고 군국주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천황제를 폐지한다는 장기적인 과제가 철회된 것은 아니었다.¹⁸⁾

더구나 일본이 패전하기 직전에 국무성에서 지일과의 거두 조셉 그루가 퇴진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1944년 12월 국무차관으로 취임하여 천황제 존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던 그루의 역할은 1945년 6월 30일 대일 강경파 번즈가 국무장관으로 취임하면서 급속하게 저하했다. 포즈담 선언 초안에서 천황제 존속을 시사하여 일본의 조기항복을 유도하려는 그루의 의도는 번즈 국무장관과 군부의 강력한 반대로 삭제되었다. 이러한 동향의 배경에는 미국 내에서의 천황제 비판의 여론과 원폭실험 성공으로 소련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¹⁹⁾

이에 더하여 1945년 전쟁의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천황의 전쟁책임에 관한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국무성이 천황의 전범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1945년 2월 23일 SWNCC가 SFE에 천황의 처우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면서였다. 여기서 항복

16) 五百旗部真, 「アメリカの対日占領管理構想」, 『戦後日本・占領と戦後日本』, 岩波書店, 1995, 110~114쪽.

17) 五百旗頭真, 『日本の近代6・戦争・占領・講和』, 中央公論社, 2001, 159쪽.

18) 앞의 책, 『資料日本占領I・天皇制』, 89~92쪽.

19) 앞의 논문, 「アメリカの対日占領管理構想」, 120쪽.

후 천황의 처우와 전범의 처벌에 관한 문제가 검토되었으며 3월 13일에는 천황 및 황족의 처우와 천황이 도주하거나 행방불명되었을 때, 또는 천황이 퇴위할 때 취해야 할 정책 등이 검토되었다.²⁰⁾ 이 과정에서도 ‘지일파’는 전범명부에 천황의 이름을 실으면 일본 국민 전체가 철저하게 항진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²¹⁾ 대부분의 미국인과 국제여론은 천황과 일본인의 천황승배에 대하여 적의를 표하고 있었으며 천황을 전범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천황제가 절대 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점령군 최고사령관 맥아더에게 막대한 권한이 부여되었던 것은 천황과 일본 지배층에게 있어서 커다란 행운이었다. 패전 직후 8월 22일 미국 정부가 확정한 ‘미국의 초기 대일 방침’(SWNCC150/3)에서는 “최고사령관은 그 책임 기간 중에 항복조항을 실시하고 또한 미국의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일체의 권한을 가진다”²²⁾고 하여 맥아더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 간접통치와 일본의 비군사화, 민주화를 명기하고 있었다. 아울러 천황의 처벌 여부에 관해서도 수차례의 논의를 거듭한 끝에 1945년 10월 26일 미국은 엄중한 비밀을 유지하면서 천황의 유죄를 입증하는 입수 가능한 모든 증거의 수집에 착수할 것을 최고사령관 맥아더에게 다시했다.²³⁾ 이로써 워싱턴에서의 천황제 존속에 관한 문제와 천황을 전범으로 기소할 것인가의 문제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은 맥아더의 판단을 기다리게 되었다.

3. 맥아더의 천황제 인식

맥아더 사령부(연합국남서태평양군)에서 대일심리작전을 주도한 펠러스의 천황제에 대한 인식은 맥아더의 천황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맥아더는 이미 1945년 5월 마닐라에서 “천황은 도쥬(東条)장군 등의 포로라고 생각한다. 전쟁의 진정한 책임은 그들 군인에게 있다. 일본의 통치 구조를 영구히 바꾸는데 천황은 도움이 된다”²⁴⁾는 인식

20) SWNCC55(앞의 책, 『資料日本占領 I · 天皇制』, 400-401쪽).

21) 1945년 8월 7일 그루의 국무장관 앞으로의 서한(위의 책, 406쪽).

22) 위의 책, 390쪽.

23) SWNCC55/6의 수정판. 위의 책, 455쪽.

을 측근들에게 피력하고 있었다. 또한 8월 6일 히로시마 원폭이 투하된 이후에는 측근에게 “일본인의 눈앞에서 천황을 욕보일 생각은 전혀 없다. 천황을 통하면 완전히 질서있는 통치를 유지할 수 있다”²⁵⁾고 말하고 있다. 이는 곧 맥아더가 이미 일본이 패전하기 전부터 천황을 점령정책에 이용한다는 기본적인 방침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실제로 패전 직전 맥아더 사령부는 미영합동군의 심리작전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여기서 ‘목적달성’을 위해 천황을 이용한다는 정책이 승인되었다.²⁶⁾ 패전 이후 결사항전을 굽히지 않던 수백만 일본군이 천황의 조칙 하나로 한발의 총소리도 없이 무장해제하는 것을 보면서 맥아더의 천황의 이용방침 계획은 더욱 굳어졌을 것이다.

맥아더의 이러한 인식은 펠러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펠러스는 1945년 8월 19일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700만의 일본군 장병이 항복한 것은 기적과 같다. ... 금후 천황의 존재가 필요 없어진다 하더라도 역시 천황을 이용한 것은 현명했다”²⁷⁾고 자신의 심리작전이 적중했음을 자찬했다. 펠러스의 천황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1945년 10월 2일 맥아더에게 제출한 ‘천황에 대한 각서’이다. 그 요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천황에 대한 일본국민의 태도는 대부분 이해되지 않고 있다. 기독교도와 달리 일본국민은 혼을 통하는 신을 가지지 않고 있다. 그들의 천황은 조상의 미덕을 전하는 민족의 상징이다. 천황은 과오도 부정도 범할 리가 없는 국가정신의 화신이다. 천황에 대한 충성은 절대적인 것이다. ... 전쟁범죄인으로 천황을 처벌한다면 그것은 모독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무혈침공을 이룩하기 위해 우리는 천황의 진력을 요구했다. 천황의 명령으로 700만 명의 병사가 무기를 버리고 신속하게 동원 해제되고 있다. 천황의 조치로 수만, 수십만 미국인의 사상자를 피할 수 있었고 전쟁은 예정보다 훨씬 조기에 종결되었다. ... 만약 천황이 전쟁범죄인으로 재판에 회부된다면 통치기구는 붕괴하고 전국적 반란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들은 무장 해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과 유혈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수만 명의 민사행정관과 함께 대규모의 과전군을 필요로 할 것이다. ...미국의 장기적 국익을 위해서는 상호존경과 신뢰와 이해에 의거하여 동양제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일본에 영속적인 적의를 품지 않게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하다.²⁸⁾

24) 앞의 책, 『敗北を抱きしめて』, 下, 18쪽.

25) 위와 같음.

26) 위의 책, 14쪽.

27) 앞의 책, 『昭和天皇2つの独白録』, 81쪽.

28) 앞의 책, 『資料日本占領1・天皇制』, 515-516쪽

펠러스의 천황에 대한 인식은 1946년 1월 25일 맥아더가 아이젠하워 육군참모총장 앞으로 보낸 기밀전문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여기서는 이에 앞서 1945년 12월 29일 미국의 통합참모본부가 맥아더에게 천황의 전쟁범죄를 입증하는 자료를 수집하라고 지시한 극비통달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귀관도 알고 있듯이 최종적으로 히로히토를 전쟁범죄인으로 재판에 회부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문제는 미국에서 중대한 관심사이다. 히로히토는 전쟁범죄인으로써 체포·재판·처벌을 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미국정부의 태도이다. 천황이 없어도 점령이 만족할만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시점에서 천황 재판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응당한 극비를 유지하면서 작업을 추진하면서도 지체 없이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본건에 관한 결정이 귀관의 사명 달성에 미칠지도 모르는 영향은 여기서도 충분히 인식하는 바이다. 까닭에 이 문제의 어떤 측면에 관해서도 귀관의 의견이 더없이 귀중한 것이 될 것이다.

동시에 증거의 수집은 증거가 수집되고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엄중한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9)

통합참모본부의 극비지령은 천황이 아직도 전쟁범죄인으로써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그 준비를 위해 천황의 전쟁범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극비리에 수집하여 보고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본국에서의 지령에 대하여 맥아더가 증거 수집을 위해 조치를 취한 흔적은 전혀 없다.³⁰⁾ 이른바 직무유기를 한 셈이지만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본국의 워싱턴이 이를 알 리가 없었다. 그 대신 이듬해 1월 25일자로 아이젠하워 육군참모총장에게 보낸 기밀전문에서 맥아더는 “과거 10년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천황이 일본제국 정치상의 제반 결정에 관여한 것을 나타내는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거짓보고를 하면서 천황을 재판에 회부할 것인가의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천황을 고발한다면 일본국민들 사이에 반드시 대소동을 야기하고 그 영향은 아무리 과대시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일본 전체가 소극적 내지 반적극적인 수단에 의해 저항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29) 위의 책, 460~451쪽.

30) 栗屋憲太郎, 『東京裁判論』, 大月書店, 198쪽.

,.....지하운동에 의한 혼란, 무질서 상황이 산악지대와 그 주변에서의 게릴라전으로 발전해 가는 것도 상상할 수 있다. 생각건대 그렇게 되면 근대적인 민주주의 방식을 도입하는 희망은 모두 사라지고 최종적으로 군사지배가 끝났을 때 자유를 박탈당한 대중은 아마도 공산주의 노선에 따른 어떤 형태의 엄격한 확실적인 관리를 지향하게 될 것이다.....이러한 사태가 되면 점령군의 대폭적인 증강이 불가결할 것이다. 최소한으로 보아도 아마도 100만의 군대가 필요하게 되며 무기한으로 이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행정관을 전면적으로 보충하여 불러들이지 않으면 안 되며 그 규모는 아마도 수십만에 달할 것이다.³¹⁾

여기서 맥아더가 천황을 재판에 회부하면 통치기구가 붕괴되고 전국적으로 혼란이 야기되어 유혈사태가 불가피할 것이라거나, 수만 명의 민사행정관과 대규모의 파견군이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은 펠러스의 각서 이상으로 과장되고 있었다. 이 문서는 천황제 존속과 천황 면책에 거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것으로 천황의 전쟁책임 문제가 완전히 해결을 본 것은 아니었다. 바로 그 열흘 후의 2월 5일에는 호주의 맨스필드 검사가 도쿄에 도착하여 국제검찰국(International Prosecution Section, 약칭 IPS)에 전범 리스트를 제출했으며 그 7번째 명단에 천황 히로히토의 이름이 올라있었다.³²⁾

4. 천황 면책의 복합적 요인

천황이 도쿄재판에 소환될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GHQ와 궁중과의 사이에 천황면책을 위한 정치공작이 은밀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1946년 2월 20일 테라사키 히데나리가 궁내성 어용과 통역으로 발탁된 것은 천황 면책을 주요 임무로 GHQ와 궁중과의 파이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였다. 1장의 천황 독백록에서도 보았듯이 테라사키는 맥아더의 군사부관 펠러스와 빈번한 접촉을 통해서 천황의 전범 기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수기를 남겨둘 필요성이 있다는 암시를 전달받았다. 3월 6일 천황이 사실상의 퇴위거부를 선언한 것³³⁾은 GHQ와의 막후공작을 통해서 미국이 자신을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는

31) 앞의 책, 『資料日本占領1・天皇制』, 463~464쪽.

32) 앞의 책, 『東京裁判論』, 201쪽.

33) 木下道雄, 「側近日誌」, 1946. 3. 6(『文芸春秋』1989. 4, 189쪽).

확신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 천황이 심한 독감에도 불구하고 궁중의 집무실까지 침대를 옮겨와 독백록을 작성하기 시작한 것은 3월 18일의 일이었다.

이와 같이 점령기 천황제 존속과 천황의 전쟁책임 면책에는 맥아더와 ‘지일파’, 펠러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펠러스를 비롯한 ‘지일파’의 천황제 존치론이 갖가지 이견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철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천황제 폐지와 천황 처벌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미국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이용가치가 충분하다는 지일파의 천황제 효용성에 대해서는 이를 능가하는 대체논리가 없었다는 점을 들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천황제 처우에 대한 의견대립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항복과 점령행정이라는 단기 과제에 관해서는 코스트 삭감의 필요에서 천황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천황제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의 주일 정치고문 대리 죠지 아치슨조차도 “천황이 퇴위한다면 정부 내의 정치적 불안정을 증대”할 것이라고 하여 점령정치에서의 천황제의 효용성을 인정하고 있었다.³⁴⁾ 다만 군국주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천황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장기적인 과제가 철회되지 않았을 뿐이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천황제가 일본사회에서 불가결한 안정요소라는 ‘지일파’의 주장은 정치적 대립을 초월하여 보다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최고사령관 맥아더에게 절대적인 권한이 부여되었던 것은 천황제 존속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맥아더가 자신의 회상기에서 “나는 일본국민에 대하여 사실상 무제한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역사상 어떤 식민지 총독도, 정복자도, 총사령관도 내가 일본국민에 대하여 가졌던 만큼의 권력을 가진 일은 없었다”³⁵⁾고 회상하고 있듯이 점령지 일본에서 맥아더는 천황의 상위에 군림하고 있었다. 이에 더하여 맥아더 개인의 정치적 개성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점령군 최고사령관으로 재임한 근 6년간 천황의 11차례에 걸친 방문에 대하여 단 한 차례도 답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본인과의 개별적인 접촉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었다. 그것은 황실의 전통에 젖어있는 일본국민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천황에게 바치는 외경심을 자신에게도 바치도록 하려는 의도에 의한 것이었다.³⁶⁾

34) 앞의 책, 『資料日本占領1・天皇制』, 523쪽. 트루먼 대통령 앞으로의 서한.

35) マッカーサー著, 島津一夫訳, 『マッカーサー回想記』下, 朝日新聞社, 1964, 129쪽.

이오키베 마고토(五百旗頭)는 맥아더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한 문서 SWNCC150/3의 지령을 두고 미국 정부 ‘최악의 문서’³⁷⁾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무성 내에서 대일강경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맥아더에게 모든 권한이 일임된 것은 천황과 그 측근들에게는 커다란 행운이었다. 더구나 천황의 전범 문제에 대한 조사를 맥아더에게 전적으로 일임한 것은 천황의 전쟁책임 면책에 결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점령 초기 점령군의 정치는 대부분 급진적인 개혁파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재벌해체, 농지개혁, 노동문제 등은 그들의 중요한 성과였다. 그러나 천황의 문제에 관한 한 그것은 개혁파의 권한 밖이었다.³⁸⁾

한편 맥아더에게 절대적인 권한이 주어졌다고는 하지만 1945년 9월은 맥아더에게 정치적인 위기의 시기이기도 했다. 9월 24일에는 런던 외상회담에서 소련 대표가 맥아더의 점령정책을 비난하면서 미영중소 4개국의 관리이사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해 왔다. 또한 미국 정부에서는 맥아더의 언동에 대한 불만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트루먼 대통령이 맥아더의 일시귀국과 의회출석을 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맥아더는 외부로부터의 모든 간섭을 배제하고 자신의 절대적인 권한을 유지하면서 점령정책을 원활하고 급속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었으며 여기서 정치적 도구로서의 천황의 중요성이 새삼 강하게 인식되었던 것이다.³⁹⁾ 이러한 시점에서 1945년 9월 27일에 이루어진 맥아더와 천황의 회견은 점령정책에 천황의 협력을 이끌어내려는 맥아더의 정치적 의도가 강하게 작용한 것이었다.

5. 일본국헌법과 상징천황제의 탄생

일본의 점령통치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던 맥아더는 천황의 전쟁책임과 천황제 존속에 최대의 협력자였다. 물론 그 배경에는 동아시아에서 공산세력의 확대를 저지하고 일본을 반공의 장벽으로 삼으려는 미국의 의도가 있었다. 다만 미국이 천황제 존속의 길

36) 五百旗頭真, 『日本の近代6・戦争・占領・講和』, 中央公論社, 2001, 242쪽.

37) 위의 책, 238쪽.

38) 歴史学研究会編, 『日本同時代史』, 1, 敗戦と占領, 青木書店, 1990, 306쪽.

39) 豊下橋彦, 「天皇・マッカーサー会見の検証」, 『昭和の終焉』, 岩波新書, 1990, 83쪽.

을 열어주었다고 해서 그것을 진전과 같이 천황제의 절대적인 권위를 남겨두려 한 것은 아니었다. GHQ가 일본의 점령정책에서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군국주의에 정신적 지주가 되었던 천황 신격화를 폐지하는 일이었다.

GHQ에 의한 막대한 황실재산의 동결, 신도지령, 천황의 '인간선언' 등은 모두가 천황 신격화를 폐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1946년 11월에 공포된 현행 일본국 헌법 제1조에서 천황을 '상징'으로 규정한 것은 천황 신격화의 폐지에 쐈기를 박은 것이었다. 특히 맥아더는 1946년 초의 단계에서 천황의 절대적인 권위와 신성을 규정한 대일본제국헌법을 폐기하고 신헌법 제정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있었다. 만약에 2월 26일에 발족하는 극동위원회가 천황제 폐지를 요구하는 국제여론(특히 소련과 호주)을 대변하여 급진적인 개혁안을 권고하게 되면 맥아더로써는 점령통치에 치명적인 장애가 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맥아더는 2월 3일 GHQ 민정국에 '맥아더 3원칙'을 제시하여 극동위원회가 발족하기 전에 일본국헌법 초안을 완성하도록 극비지령을 내렸다. '맥아더 3원칙'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천황은 국가 원수의 지위에 있다. 황위는 세습한다. 천황의 직무 및 권능은 헌법에 의거하여 행사되며 헌법에 표명된 국민의 기본적 의사에 응하는 것으로 한다.
2. 국권의 발동인 전쟁은 폐지한다. 일본은 분쟁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써의 전쟁, 그리고 자국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전쟁도 포기한다. 교전권이 일본군에게 주어지는 일도 없다.
3. 일본의 봉건제도는 폐지한다(후략).

GHQ 민정국이 '맥아더 3원칙'에 의거하여 거의 일주일 만에 '맥아더초안'을 완성하고 일본정부에 제시한 것은 2월 13일의 일이었다. '맥아더 초안'은 5월 16일 제90회 일본제국국회의의 심의를 거쳐 약간의 수정을 가한 후 11월 3일 공포되고 이듬해 5월 3일부터 시행되었다. 이것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일본국헌법'이다. 여기에는 '맥아더 3원칙'의 1항과 2항이 각각 다음과 같은 일본국헌법 1조와 9조에 반영되었다.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국민통합의 상징이며 그 지위는 주권을 가지는 일본국민의 총의에 의거한다.

제9조 1항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회구하여 국권의 발동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2항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기타 전력은 이를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전후 일본의 천황제를 전전의 절대주의적인 천황제와 구분하여 ‘상징천황제’라고 부르는 것은 제1조의 ‘상징’ 규정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일본국 헌법을 ‘평화헌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제9조의 ‘전쟁포기’ 조항에 의한 것이다. 오늘날 일본의 우파들이 헌법 개정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 ‘전쟁포기’ 조항을 어떤 형태로든 바꾸고 싶기 때문이다.

일본국헌법에 의해 천황은 정치적 간섭이나 정치행위가 일체 금지되었다. 천황은 국회소집, 총선거일 공시, 수상 임명, 영전 수여 등의 형식적인 의례행위만을 하게 되었으며 모든 정치적인 책임은 내각이 지게 되었다. 패전 전의 대일본제국헌법에 비하여 천황의 권한이 대폭 축소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일본국헌법 제1조에 의거한 ‘상징천황제’는 천황의 전쟁책임 면책과 불가분의 관계에서 탄생했으며 그것이 곧 과거의 역사를 왜곡하고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즉 천황이라는 동일한 인격이 전전과 전후라는 기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시대를 연결함으로써 천황제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전쟁책임을 은폐하려는 욕구는 더욱 강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천황은 1926년 즉위하여 패전에 이르는 20년간을 절대적이고 신성불가침한 신으로 군림하면서 군국주의 시대에 정신적 지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국헌법에 의해 일본국과 일본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그 지위와 존속을 보장받으면서 전쟁책임을 비롯하여 침략전쟁에서 천황의 이름으로 자행한 갖가지 가해행위들이 은폐되어 버린 것이다.

결국 천황의 면책과 ‘상징천황제’의 탄생은 일본 국민에게 전쟁에 패했다는 인식이나 가해자로서의 책임을 자각하기보다도, 역시 천황은 변함없이 국민통합의 구심점이라는 인식을 재차 확인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침략전쟁에서 최고지도자였던 천황이라는 인격을 매개로 ‘상징천황제’가 탄생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전쟁책임에 대한 자각적인 반성의 기여는 물론이고 역사인식의 문제점을 남기는 근원적인 요인이 있는 것이다.

「미국의 점령과 천황의 전쟁책임」 토론문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1. 개요

1) 미국의 대일 점령정책에서 천황제는 어떻게 논의되었는가?

	천황제 존속	천황제 폐지
세력	‘지일파’(코빌, 라이샤워)	국무성 고위 간부
이유	-점령 코스트 삭감 ※천황제 폐지시 일본 국민의 반발과 비협력으로 질서유지 곤란 -다만, 천황제의 위험성은 인식, 헌법 개정을 통한 천황의 지위 수정 필요성 제기	-천황제와 침략전쟁은 불가분의 관계, -천황제 이용은 일본의 민주변혁이라는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일본 관료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점령군에 협조할 것 -중국과 미국 내의 천황제 폐지 여론 증시

2) 왜 소수인 ‘지일파’의 주장이 채택되었는가?

- 제2차 세계 대전 후의 유럽 문제에 관해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미국의 대통령이 일본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여유가 없었으며, 정부 고관 가운데 일본에 관한 지식을 가진 자는 거의 없었음. 그 결과 대일 정책에 관한 플랜은 장기간에 걸쳐 하부의 일본전문가에게 위임되고 있었으며 지일파는 일본에 관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었음.
- 워싱턴에서의 천황제 존속에 관한 문제와 천황을 전범으로 기소할 것인가의 문제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은 맥아더의 판단을 존중했는데, 일본의 점령통치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던 맥아더는 천황의 전쟁책임 면책과 천황제 존속을 위한 최대 협력자였음.
 - 그 배경에는 동아시아에서 공산세력의 확대를 저지하고 일본을 반공의 장벽으로

삼으려는 미국의 의도가 있었음.

- 맥아더는 천황을 재판에 회부하면 통치기구가 붕괴되고 전국적으로 혼란이 야기되어 유혈사태가 불가피할 것이라거나, 수만 명의 민사행정관과 대규모의 파견군이 필요할 것이라고 펠러스의 각서 이상으로 과장되게 보고함.

- 천황제 폐지와 천황 처벌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미국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이용 가치가 충분하다는 지일파의 천황제 효용성에 대해서는 이를 능가하는 대체논리가 없었음.

3) 천황은 어떻게 면책되었나?

-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천황이 도쿄재판에 소환될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GHQ와 궁중과의 사이에 천황면책을 위한 정치공작이 은밀하게 전개되고 있었음.
- 맥아더는 외부로부터의 모든 간섭을 배제하고 자신의 절대적인 권한을 유지하면서 점령정책을 원활하고 급속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었으며 여기서 정치적 도구로서의 천황의 중요성이 새삼 강하게 인식되었음.
 - 다만 신도지령, 천황의 ‘인간선언’ 등을 통해 천황의 절대적 권위, 즉 천황 신격화는 폐지함.

4) 일본군 헌법과 상징천황제의 탄생과 그것이 남긴 문제는 무엇인가?

- 맥아더가 1946년 2월 3일 GHQ 민정국에 지시한 ‘맥아더 3원칙’이 헌법에 반영됨.
 - 3원칙의 1항(천황의 지위) 2항(전쟁 포기)이 헌법 1조와 9조에 반영됨.
GHQ 민정국에 ‘맥아더 3원칙’
- 일본국 헌법 제1조에 의거한 ‘상징천황제’는 천황의 전쟁책임 면책과 불가분의 관계에서 탄생했으며 그것이 곧 과거의 역사를 왜곡하고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성을 가진. 즉 천황이라는 동일한 인격이 전전과 전후라는 기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시대를 연결함으로써 천황제의 연속성을 보강하고 전쟁책임을 은폐하려는 욕구는 더욱 강렬해질 수밖에 없는 것임.

2. 질의

- 미국이 일본 점령의 효용성을 위해 천황을 면책하고 천황제를 이용했는데, 일본 우익의 일부에서도 쇼와 천황의 패전책임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천황제를 유지하면서 천황을 바꾸는 방안은 논의된 적이 없는지?
- 일본의 전쟁책임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근본적인 원인으로 침략전쟁의 최고지도자였던 천황이 '상징천황제'를 통해 존속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이를 너무 강조할 경우 일본 지식인이나 국민이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일본 패전과 한국해방에 따른 재일한인의 선택

발표 : 최영호 (영산대) / 토론 : 김태기 (호남대)

I. 머리말

일본 패전 당시 한반도 등의 일본제국 지배지역에 있어서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일본군과의 네트워크가 긴밀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일찍부터 「세화회(世和會)」와 같은 자생단체들이 결성되어 유지되었다. 연합국군 점령군이 진주가 늦어지고 점령체제가 뒤늦게 정비되면서 기존의 일본제국주의 지배기구와 연계하는 가운데 일본인들은 연락조직을 구성하고 패전 후의 인양쇄도가 초래할 인명피해를 사전에 조직적으로 방지하는 움직임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재일한인의 경우는 해방 전부터 유지해 온 스스로를 통제할 조직이라고는 일본경찰과 관계를 맺고 있던 각 지방의 「흥생회(興生會)」 밖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관변적인 성격의 지도자와 그 지도력만으로는 폭발적인 해방감에 의한 귀환쇄도와 민족단체 결성 움직임을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해방직후에 시기를 한정하여 재일한인 커뮤니티에 관한 연구 성향을 나누어 볼 경우, 소위 ‘능동설’ 혹은 ‘운동설’, 그리고 ‘수동설’을 대별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재일한인 연구에서도 이 두 성향의 혼종이 나타나고 있는데, 연구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 양분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능동설’ 혹은 ‘운동설’ 연구자들은 민족단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주체성이나 적극성을 강조하여 연구하고 있는 경향을 말한다.

해방직후에 활동한 민족단체로서 조련(朝連)의 조직적 활동을 정리한 오규상(吳圭祥)의 연구성과¹⁾는 이 시기 재일한인 ‘운동설’ 연구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연구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것은 이 연구성과에서 조련의 방대한 내부 자료들을 면밀하게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련의 조직적 성향이 결성 후부터 점차 좌파 이념으로 경도되기는 했지만, 조련은 해방직후 시기의 재일한인 사회에서 가장 활발하고 광범위하게 활동했다고 하는데 이견이 없다.

한편 해방직후에 결성되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활동하고 있는 민단(民團)은 조련에 비하여 전후 재일한인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역사성과 현실성을 지니고 있는 민족단체다. 민단의 내부 사료를 정리한 연구로는 단연코 민단 조직 내부의 자료를 꼽을 수 있다.²⁾

1) 吳圭祥(2009), 『ドキュメント在日本朝鮮人連盟1945-1949』, 岩波書店.

2) 민단(民團)의 경우, 재일본대한민국민단(1997), 『민단50년사』, 재일본대한민국민단; 在日本大韓民國民團中央本部(2008), 『在日民團DVD』, 在日本大韓民國民團.

여기에 조련 계통 청년단체에 관한 연구³⁾, 건청(建靑)과 같은 우파 단체에 관한 연구⁴⁾도 ‘운동설’ 연구의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 밖에 ‘능동설’ 혹은 ‘운동설’ 연구로서, 재일한인의 민족교육에 관한 연구⁵⁾, 재일한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⁶⁾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수동설’ 연구자들은 재일한인 사회를 수동적인 대상으로 상정하고 점령당국이나 일본정부가 재일한인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수행해 왔는지 연구해 왔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점령정책의 대상으로서 재일한인사회를 조명한 김태기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⁷⁾ 이 연구결과는 해방직후 재일한인 문제에 대해 점령당국의 조직과 담당자가 어떻게 관여했는지 인터뷰와 자료조사를 통해 면밀하게 밝히고 있다. 이 밖에도 이른 시기부터 점령군 자료를 활용하여 해방직후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문제에 관한 점령당국과 일본 정부의 정책수립 과정을 연구한 오누마 야스아키(大沼保昭)의 연구는 괄목할 만하다.⁸⁾

‘능동설’과 ‘수동설’은 기본적으로 재일한인의 집단적 움직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재일한인 개인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찍부터 재일한인 개개인에 의한 회고록들이 출간되어 해방직후 재일한인 사회의 움직임을 각자 다른 각도에서 조망하게 했다. 이념적으로 구분한다면, 우파적 성향의 회고록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이강훈(李康勳),⁹⁾ 권일(權逸),¹⁰⁾ 김중재(金鍾在),¹¹⁾ 박헌행(朴憲行)¹²⁾, 오기문¹³⁾ 등을 꼽을 수 있다. 여기에 우파적 성향의 지도자에 관한 연구 결과도

3) 鄭榮桓(2013), 『朝鮮獨立への隘路: 在日朝鮮人の解放五年史』, 法政大学出版局.

4) 최영호(2012), 「한반도 신탁통치문제의 로컬리티: 해방직후 재일조선인 사회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0호.

5) 小沢有作(1988), 『在日朝鮮人教育論』, 亞紀書房; 金德龍(2002), 『朝鮮學校の戦後史: 1945~1972』, 社会評論社; 宋基燦(2012), 『「語られないもの」としての朝鮮學校』, 岩波書店; 정희선(2011),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운동(1945~1955)』, 청암대학교 재일코리아연구소.

6) 韓載香(2010), 『在日企業の産業經濟史: その社会的基盤とダイナミズム』, 名古屋大学出版会; 李洙任(2012), 『在日コリアンの經濟活動: 移住労働者 起業家の過去・現在・未来』, 不二出版; 이민호(2015), 『신한은행을 설립한 자이니치리더』, 통일일보.

7) 金太基(1997), 『戦後日本政治と在日朝鮮人問題: SCAPの対在日朝鮮人政策1945~1952年』, 勁草書房.

8) 大沼保昭(1987), 『單一民族社会の神話を超えて: 在日韓国・朝鮮人と出入国管理体制』, 東信堂.

9) 이강훈(1994), 『민족해방운동과 나: 靑雲 이강훈 자서전』, 제삼기획.

10) 權逸(1987), 『權逸回顧錄』, 育英出版社.

11) 金鍾在(1978), 『渡日韓国人一代』, 図書出版社.

많이 나왔다.¹⁴⁾ 이에 반하여 좌파적 성향의 지도자에게서는 장정수(張錠壽) 이외에는 그다지 회고록이 보이지 않지만,¹⁵⁾ 이들 지도자에 관한 연구결과는 우파적 지도자에 비해 훨씬 많은 편이다.¹⁶⁾ 다만 1945년 10월 조련 결성 전국대회에서부터 1949년 10월 강제해산 때까지 위원장을 계속 역임한 윤근(尹權)에 관하여 아직 이렇다 할 연구가 없다. 이것은 해방정국의 재일한인 사회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또는 재일한인 좌파 지도자의 행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연구과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 발표문은 해방직후 특히 1945년 말까지의 시기를 중심으로 하여 재일한인의 집단적 '선택'이라고 하는 측면에 집중 조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능동설' 혹은 '운동설'의 입장에 서서 일본 패전과 한반도 패전에 대해 그들이 집단적으로 어떠한 선택을 보였는지 실증적인 태도에서 사료를 통해 논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해방직후 재일한인 사회에서 중요한 집단적 선택으로 거론되는 것은 '해방민'으로서 스스로를 자각하는 가운데 해방된 조국으로 귀환해 가는 움직임, 그리고 잠정적으로나마 일본사회에 남아서 민족단체를 결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었다. 이 발표문에서는 해방직후 재일한인의 집단적 움직임에 대한 실태를 교과서적으로 기술하고,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연구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때 필자의 최근 연구동향을 함께 소개하게 될 것이다. 가능한 2000년대에 들어 새로 발굴되거나 공개된 자료, 그리고 새로운 연구결과를 소개함으로써 관련 역사학 교육의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한다.

12) 朴憲行(1995), 『在日韓人一世: 戰後50年の想い』, 新幹社.

13) 오기문(1998), 『오기문 회고록』, 한민족.

14) 金一勉(1973), 『朴烈』, 合同出版; 김삼웅(1996), 『박열평전』, 가람기획; 최영호(2015), 「해방직후 박열의 행적으로 통해 본 재일한인사회의 로컬리티」 『재외한인연구』 36호; 성주현(2010), 「해방후 원심창의 민족운동과 통일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5호.

15) 張錠壽(1989), 『在日60年自立と抵抗』, 社会評論社.

16) 林哲(1998), 『二〇世紀を生きる朝鮮人: 「在日」から考える』, 大和書房; 樋口雄一(2014), 『金天海: 在日朝鮮人社会運動家の生涯』, 社会評論社; 김인덕(1998), 「재일조선인 운동과 김두용」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8권; 鄭榮桓(2003), 「金斗鎔と「プロレタリア国際主義」」 『在日朝鮮人史研究』 33号; 中野敏男(2005), 「日本の戦後思想を読み直す(4)自閉してゆく戦後革命路線と在日朝鮮人運動: 金斗鎔と日本共産党との間」 『前夜』 4号.

II. 해방된 조국으로의 귀환 움직임

전쟁 말기에 200만 명에 달하던 재일한인들은 일본의 패전을 예감하면서부터 본국 귀환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1945년 8월 초에 이미 일본본토에 대한 연합국 공습을 피하고자 하여 한반도로 피신하기 위해 시모노세키(下關) 부근에 5천 명 정도의 한인들이 몰려들었다.¹⁷⁾ 포츠담 선언 수락 직후 일본정부는 8월 21일 차관회의에서 「강제이입」한인에 대한 징용해제 방침을 결정하고, 9월 1일 경보국(警保局)을 통해 각 지방장관에게 「조선인 집단 이입 노동자 등의 긴급조치의 건」을 지시하여 발령하고 수송대책과 노무자인술을 권장했다.¹⁸⁾ 하지만 이때 일본정부의 지시는 패전직후의 혼란에 직면하여 예산과 인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고육지책에 불과했고 붓물처럼 항구에 밀려드는 귀환자들의 움직임을 행정적으로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점령군 진주 후에 후생성 산하에 원호 관련 기구가 만들어지고 각 항구에도 원호체계가 갖추어지면서 송출인원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통계가 집계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체계적 통계 집계 이전에는 개별적으로 한반도에 귀환한 한인이 정확히 몇 명이었는지 파악할 수 없었고 각 지방정부에서도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해방직후의 귀환자 수를 둘러싸고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개별적인 귀환 쇄도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는 전체 귀환자 수에 대해서 추정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1945년 8월 일본패전으로부터 1946년 12월 점령군의 공식적인 귀환 수송이 마치는 시기까지 일본을 떠난 재일한인 수가 대체로 '140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필자는 해방직전 재일한인의 추정 수 200만 명에서 1947년 9월 일본 내무성 조사에 따른 재일한인의 수 529,907 명을 제외하여 '약 140만 명'으로 단순히 추산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¹⁹⁾ 이 '140만 명 정도' 주장에 대해서 그 내역을 밝히고자 하는 여러가지 연구조사 시도가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예를 들어, 스즈키 구미(鈴木久美) 연구자는 1945년 8월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일반인·노동자·군인·군

17) 森田芳夫(1964), 『朝鮮終戦の記録』, 巖南堂書店, p. 130.

18) 引揚援護廳長官房總務課記録係(1950), 『引揚援護の記録』, 引揚援護廳, p. 55.

19) 최영호(1995), 『재일한국인과 조국광복: 해방직후 본국귀환과 민족단체활동』, 글모인, p. 86.

속 포함하여 총 940,438명, 1946년 4월부터 12월 말까지 82,900명, 기타 통계에서 누락된 수가 약 4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하는 흥미로운 추산 내역을 발표한 바 있다.²⁰⁾

재일한인이 귀환한 일본의 항구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센자키 항구와 하카타 항구를 꼽을 수 있다. 패전직후에는 센자키 항구에 귀환자가 몰렸으나 하카타 항구가 정비되고 나서는 가장 많은 귀환자를 송출시켰기 때문이다. 센자키 항구의 귀환에 관한 연구에서는 스즈키 구미의 연구²¹⁾가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녀는 후생성이 1945년 10월에 생산한 「보호인양관계잡건」, 또는 같은 시기에 야마구치현(山口縣)이 정리한 「장관업무인계서」를 비롯하여 지방정부의 공식문서들을 발굴하고 이곳에 원호체제가 정립되기 이전부터 재일한인 귀환에 대해 지방정부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임해 왔는지 규명해 냈기 때문이다. 특히 그녀의 연구 가운데는 야마구치현이 실시한 ‘인양민사무소(引揚民事務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는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녀는 이 논문을 통하여 패전 후 일찍부터 센자키(仙崎) 항구 부근에 설립된 「시모노세키 조선인 귀국자 구호회 사무소 센자키 출장소」와 같은 재일한인의 자생조직이 어떠한 원호활동을 전개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하카타 항구의 귀환에 관한 연구는 이즈미 가오루(出水薫) 연구²²⁾ 이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시도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즈미 연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에 들어 필자는 최근 하카타 항구의 귀환자 원호체제 정비가 재일한인의 송출보다는 해외일본인의 접수에 맞추어져 이루어진 것을 실증하여 발표한 바 있다.²³⁾ 후쿠오카현(福岡縣) 현지사의 경질에 따라 1945년 10월에 정리된 「사무인계서」를 보면, 일본인의 귀환 문제를 담당한 「후생과(厚生課)」는 「외지 인양민 보호 실시요령」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가 하부 팀으로 서무반·급식반·의료반·숙사반·수송반을 두고 원호업무를 체계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음을 알렸다. 반면에 한인의 귀환 문제를 담당한 「민생과(民生課)」는 「귀환 반도인 대책에 관한 건」이라는 보고 문서를 통해

20)鈴木久美(2010), 「解放 後の朝鮮人帰還者数に関する再検討」『在日朝鮮人史研究』40号, p. 190.

21)鈴木久美(2006), 「在日朝鮮人の帰還援護事業の推移: 下関・仙崎の事例から」『在日朝鮮人史研究』36号, pp. 163-184.

22)出水薫(1993), 「敗戦後の博多港における朝鮮人帰国について: 博多引揚援護局 ‘局史’ を中心とした検討」『法政研究』(九州大学法学部)60卷1号, pp. 71-101.

23)崔永鎭(2015), 「終戦直後博多港における引揚援護体制」『訪日学術研究者論文集』(日韓文化交流基金)21卷, pp. 567-584.

아래와 같이 장황한 서술로 점령군이 진주할 때까지 그저 열심히 노력했다고 전했다.²⁴⁾

후쿠오카현은 지리적 관계로 예로부터 도선 왕래하는 조선인이 많았는데, 특히 중일전쟁 이후 노무자 수요 증가에 따라 이에 대한 공급을 반도에 구했기 때문에 점차 증가하여 올해 6월 말 현재 후쿠오카 현 주재 반도인이 19만 8천여명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공장 사업장의 소위 집단이입 조선인 노무자 5만 명 (1939년 이래 이입 누계 17만 1천 명)에 달하여 이들에 대해서는 그간 주의 깊게 적극적으로 보호 지도해 왔다. 그런데 전쟁 종결에 따라 조선인 귀환자가 하카타항 주변에 운집하여 선박 대기자를 위한 원호가 중대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현으로서는 9월 상순 선박 대기자들의 숙박과 휴게를 위한 시설이 긴급함을 통감하고 물색하다가 부득이 항구 건너편에 있는 마사회(馬事會) 건물 10동을 빌려 9월 6일에 숙사로 충당하게 했다. 시설 개조를 위해 17만엔 정도를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고 개조에 착수했다. 그러나 대기자가 수용인원 2천명을 훨씬 넘겨 접수·급식·의료·승선알선·경비·청소 등의 조치를 위해서는 주야 업무가 필요하여 민생과 직원과 흥생회(興生會) 출장소 직원 몇 명이 상주하여 유감없이 노력해 왔다.....

이와 함께 한반도의 대표적인 귀환항은 부산항이다. 부산항의 귀환자 동향이나 귀환 원호대책에 관한 연구로서는 현재 윌리엄 게인(William J. Gane)에 의한 보고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인은 2차대전 종결과 함께 제24군단 군정요원으로 한반도에 들어와 미군정청 외무처에서 일했다. 그는 1945년 9월 24일부터 1946년 10월 24일까지 외무처 난민과장으로 재임하면서 일본인과 조선인의 귀환 문제에 직접 관여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군정부대의 자료들을 활용하여 1947년에 일본인과 조선인의 귀환에 관한 보고서 「1945년 9월 25일부터 1945년 12월 31일까지의 귀환」을 정리해냈다.²⁵⁾ 이 보고서를 일부 보완한 논문²⁶⁾으로 그는 1949년에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이어 1950년 8월까지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가미한 논문²⁷⁾으로 1951년 같은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했다. 게인은 귀환자 원호 담당

24) 福岡縣(1945), 『事務引繼書』(昭和20年10月27日知事更迭), 福岡縣, pp. 68-72.

25) Gane, William J.(1947), *Repatriation: from 25 September 1945 to 31 December 1945*, Foreign Affairs Section, Headquarters USAMGIK.

26) Gane, William J.(1949), *Repatriation in Korea, September 1945 to January 1946*, Northwestern University (Master's Thesis).

27) Gane, William J.(1951), *Foreign Affairs of South Korea, August 1945 to August 1950*, Northwestern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자로서 부산항에 귀환해 오는 한인 귀환자의 모습과 귀환원호 상황을 정리해 냈다.

한편 한국의 국무총리실 산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출판한 자료집에서 해방직후 귀환자들의 부산항 상륙 직후의 느낌에 관한 회상을 찾아볼 수 있다. 비록 간단한 회상에 지나지 않으나 분명히 부산의 이미지를 남기고 있는 구술자료에서, 부산항에서 귀환자들을 환영하는 모습이나 주먹밥과 옷을 나눠주고 열차 승선을 안내하는 모습이 보이며,²⁸⁾ 그밖에 부산 부둣가의 찰떡과 같은 풍성한 먹거리²⁹⁾와 부산의 산비탈 많은 풍경³⁰⁾도 나타나고 있다. 한반도 귀환자의 부산에 관한 이미지가 이처럼 전반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것은 이들 대부분이 귀환 당시 부산에 관한 기록을 남기고 있지 않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 퇴색해진 기억력과 느낌에 의존하여 뒤늦게 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는 여타 자서전이나 회고록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자료 여건 가운데 필자는 정충해의 기록³¹⁾과 장정수의 기록³²⁾에서 강제동원 노무자와 재일한인 운동가로서의 전혀 입장이 투영된 전혀 다른 부산 이미지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³³⁾

재일한인의 귀환 문제에 대하여 최근 연구에서는 그들의 귀환 동향보다는 그들을 둘러싼 원호체계를 규명하려는 시도가 활발하다는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귀환의 동향에 관한 귀환자 회고를 새로 발굴하기에는 이제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점과 귀환정책을 둘러싸고 이제까지 규명되지 않은 외연 요인이 많이 남아있다는 점이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의 연구 동향으로서 조련 이전의 흥생회(興生會)에 관한

28)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조사1과(2006), 『똑딱선 타고 오다가 바다 귀신 될 뻔 했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p. 210(이천구);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조사1과(2006), 『가진 어딜 가? 헌병이 총 들고 지키는데』,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p. 263(김봉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조사1과(2007), 『수족만 멀쩡하면 막 가는 거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p. 180(박동화); p. 206(성봉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조사2과(2008), 『조선이라는 우리나라가 있었구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p. 91(박노영); p. 107(이장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조사3과(2009), 『아홉머리 넘어 북해도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9, p. 263(김태순); p. 318(이창하).

29) 『수족만 멀쩡하면 막 가는 거야』, p. 75(박기양).

30) 『수족만 멀쩡하면 막 가는 거야』, p. 161(권오열).

31) 鄭忠海(1990), 『朝鮮人徵用工の手記』, 河合出版.

32) 張鎔壽(1989), 앞의 책.

33) 최영호(2011), 「한인 귀환자의 눈에 비친 해방직후 부산의 이미지」 『한일민족문제연구』20호, pp. 97-123.

연구가 일본에서 활발해지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³⁴⁾ 또한 앞에 언급한 스즈키 연구자가 2014년 하반기에 히토쓰바시(一橋) 대학 대학원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이 괄목할 만하다. 필자는 요약문과 목차만을 받아보았고 아직 본문은 읽어보지 못했다. 조만간 단행본으로 출간된다고 하여 이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목차를 통해서 귀환자를 둘러싸고 일본정부·홍생회·점령당국·야마구치현·후쿠오카현·남한미군정청 등의 외연 구조를 밝히려고 시도한 것을 알 수 있다.³⁵⁾

재일한인의 귀환을 둘러싼 외연 구조에서 앞으로 규명해야 할 연구과제가 많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1946년 1월의 Tokyo Conference의 내용에 관하여 점령군 자료를 발굴하고 분석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 회의를 통해 한반도와 일본 사이 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인과 일본인 귀환자에 관한 계획 수송이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소위 귀환 수송 정책에 관한 결정적인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점령군 자료도 발굴하기 어렵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총독부 도쿄출장소의 활동이 재일한인 귀환에 끼친 영향이나, 미군정 외사처 난민과의 도쿄 및 오사카 연락소(Liaison Office)의 활동도 조사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III. 재일한인 민족단체의 결성 움직임

이제까지 초기 재일한인 민족단체의 결성 움직임에 관하여 여러가지 견해가 각종 논저를 통하여 제시되어 왔다. 하지만 조련 중앙준비위원회의 『회보』 창간호(1945년 9월 25일자)가 발견되면서 해방직후 초기의 조직적 변동에 대한 더 이상의 설왕설래가 허용되지 않게 되었다. 필자는 해당 자료를 2006년 여름에 큐슈대학 조선사연구실의 모리타(森田芳夫) 자료 속에서 발견했다.³⁶⁾ 이 자료는 해방이후 재일한인 조직의 공식문서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작성된 것이다. 이 자료를 통해서 해방직후 재일한인들이 어떻게

34) 樋口雄一(2009), 「協和会から興生会体制への転換と敗戦後への移行」『海峡』23号; 鈴木久美(2014), 「中央興生会の解散と地方興生会の改編」(在日朝鮮人運動史研究会発表文, 2014年11月).

35) 鈴木久美(2014), 「在日朝鮮人の『帰還』に関する研究(1945~1946)」(一橋大学博士論文目次).

36) 최영호(2008), 『한일관계의 흐름 2006-2007』, 논형, pp. 156-159.

민족단체를 형성하고 규합해 갔는지 알 수 있다. 특히 이 자료는 해방직후 재일한인의 대표적 민족단체 조련이 어떻게 결성되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이하 전문을 소개한다.

會報 (창간호) 1945년 9월 25일 발행

東京都 淀橋區 角筈 2-94 재일본조선인연맹 중앙준비위원회

(논설) 친애하는 조선동포여!!

전쟁은 종결되고 우리 조선은 자유와 독립의 서광이 빛나게 되었다. 동포여! 우리는 신조선 건설이라는 중대하고도 곤란한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헌신적 노력을 다하여야 될 것이며, 일본에 재류한 우리도 이 임무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현재 일본에 재류한 우리로서는 그 특수한 생활 사정 때문에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즉 전쟁 중에 무릅쓴 거대한 손해, 그로 인한 전후 실업문제, 귀국하기 위하여 東京역 下關 등에 결집한 동포의 문제, 장래 거류할 동포의 생활문제, 또 정치정세의 변동으로 양 민족간 감정상의 대립 반발, 또는 마찰의 문제 등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연합국 정부 당국에서는 물론, 일본정부에서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리라는 것은 추측할 수 있으나, 종전 후 여러가지 긴급문제 해결에 쫓겨, 우리 200여만 재류동포의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이 급속히 실시되지 못한 감이 있다. 이제는 우리도 우리 자신의 손으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에 노력하여 귀국할 동포는 원만히 속히 귀국하게 하고 잔류를 희망하는 동포에게는 생활을 안정시켜, 서로서로 협력하여 우리 조국 건설에 헌신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동포 계군의 열성과 협력으로서 비로소 여러가지 문제 해결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바이다. 또 일시적 흥분과 격정으로 냉정한 이성과 판단을 잃고 경거망동하여 鮮日간 민족간 마찰을 일으켜 화근을 千秋에 남기는 행동과 독립 국민으로서의 체면을 損하는 거동은 우리가 가장 경계하는 바이다. 계군이여! 비굴성을 포기하자! 소극적 태도를 청산하자! 새로운 건설을 위하여 奮起權力 하자!

선언 (초안)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제2차 세계대전도 “포츠담” 선언에 의하여 종결되고 우리 조선도 마침내 자유와 독립의 영광이 약속되었다. 우리는 총력을 다하여 신조선 건설에 노력할 것이며 관계 각 당국과의 긴밀한 연락 하에 우리의 당면한 일본 국민과의 厚誼 보전, 재류동포의 생활안정, 귀국동포의 편의를 기도하려 한다.

강령

- 一. 우리는 신조선 건설에 헌신적 노력을 기함.
- 一. 우리는 세계평화의 항구적 유지를 기함
- 一. 우리는 일본 국민과의 互讓友誼를 기함
- 一. 우리는 재류동포의 생활안정을 기함
- 一. 우리는 귀국동포의 편의와 질서를 기함
- 一. 우리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대동단결을 기함

결성보고

종전 직후 당면한 문제인 귀국문제, 생활문제, 일본인과의 마찰 방지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東京에 재주하는 우리 동포 유지로서 4단체가 생겼다. 최초 재류조선인대책위원회와 재일본조선인귀국지도위원회가 합하여 재일본조선인회라 칭하고 다시 재일본조선거류민연맹, 재일본조선인대책위원회와 합류하여 재일본조선인연맹을 결성하였다. 그 후 각지에서 단체가 발생하여 9월 9일 재일본조선인연맹을 주류로 건국촉진동맹, 재일본조선인거류민단, 關東지방조선인협의회, 京都, 大阪, 埼玉, 群馬, 栃木, 千葉 등 각 지방 유지 대표가 代々木역전 吉本빌딩에 회합한 결과, 대중에 입각한 연맹 결성을 위하여 중앙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본부를 淀橋區 角筈 2丁目 94番地 장학회관에 두게 되었다.

1. 조련 준비위원회의 결성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재일본조선인연맹(조련) 준비위원회가 9월 9일에 결성되었다. 산발적인 단체들을 하나로 규합해 가는 데에는 중앙홍생회에서 지도과장을 역임하고 있던 권일의 활약이 컸다. 그는 해방이 되기까지 대정익찬회(大政翼贊會)의 조사부와 전쟁협력단체 「일심회(一心會)」에서 활동했다. 그는 메이지(明治)대학 예과에 재학 중이던 1937년 고등문관사법과에 합격하여, 1939년부터 4년간 만주국 간도성 연길(延吉) 지방 법원의 판사를 역임한 입지의 인물로, 일본인과 한인 사이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다. 해방직후 재일한인 커뮤니티의 재편과정에서 이러한 「친일파」 인물이 「과거행적에 대한 반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새로운 민족단체를 지도하려 했던 것은 해방민이나 사상가들에게 타도 대상이 되었다.

조련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조득성(일본명 白川一宇)은, 기독교 목사로서 별다른 사회활동의 경험도 없었고 일반 한인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다. 권일의 회고록을 보면 부위원장의 직무를 맡은 권일과 김정홍이 주축이 되어 좌우파벌의 타협을 피하였으며, 점령군의 진주를 고려하여 영어에 능통한 조득성을 위원장으로 추대했다고 되어 있다.³⁷⁾ 반면에 김정홍은 한때 공산주의 활동을 한 경력이 있었으나 공산주의 이론가 김두용에 의해 조종되는 인물이었다고 전해진다. 김두용은, 1903년 전라남도 출생으로 東京제국대학 문학부 출신으로, 1920년대 후반 고려공산청년회 일본부에서 고경흠과 함께 출판편집활동을 했으며, 조선프로레타리아 예술동맹 東京지부에서 출판활동을 했다. 1930년대 중엽에는, 고려공산청년회 일본부 멤버에 의한 『조선신문』 발행의 편집에 관여

37) 權逸(1987), p. 91.

하기도 했다.³⁸⁾

조련 준비위원회는 이어서 전개되는 일본경찰력의 쇠퇴와 민주 개혁적 점령체제 정비라고 하는 급변하는 상황 변화 속에서, 장기간의 복역 후에 출옥한 정치범들의 사회 진출과 함께 재일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전시체제로부터의 해방감,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는 일본사회의 한인 배척 무드로부터의 소외감, 등을 흡수해 가면서 점차 정치적 성향을 띠는 조직으로 변화해 갔다.

2. 정치범 출옥과 조련 전국대회

10월 4일 점령당국리 지시한 「정치적 시민적 및 종교적 자유에 대한 제한의 철폐에 관한 각서」(소위 「인권지령」)³⁹⁾에 의해 종래의 「치안유지법」이 철폐되었다. 이에 따라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정치범이나 사상범들이 10월 10일 일제히 석방되었다. 재일한인 가운데 진보적 인사들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정치범 출옥을 위한 조직적 움직임을 보였다. 재일한인 사회에서는 일찍이 9월 25일 김두용(金斗鎔)을 중심으로 하여 조선장학회 건물 안의 「조련」 준비위원회 사무소에서 송성철(宋性徹)·조희준(曹喜俊)·박은철(朴恩哲)·남호영(南浩榮)·김정홍(金正洪) 등과 함께 「조선인정치범석방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수감 중인 정치범들을 차례로 방문하고 형무소 안에서 해방을 축하하는 파티를 열었다.⁴⁰⁾ 해방 후 도쿄 근교의 후추(府中) 형무소에 처음 방문한 것은 김정홍과 배철(裵哲)이었다.⁴¹⁾ 해방 이후 출옥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 이강훈은 그의 회고록에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했다.⁴²⁾

출옥 직후에 김천해와 이강훈은 다른 일본인 출옥자들과 함께 고쿠분지(國分寺)의 자립회관에서 요양생활을 보냈다. 이들과 함께 출옥한 가스가 쇼이치(春日正一)는 “출옥 후 갈 곳이 없던 정치범들은 일본정부가 출옥자들을 일시 수용하여 취직을 알선하기 위해

38) 高峻石(1985), 『在日朝鮮人革命運動史』, 拓植書房, pp. 63-64; pp. 124-125.

39) SCAPIN-93, 1945.10.4. Removal of Restrictions on Political, Civil, Religious Liberties. 竹前榮治(1993), 『GHQ 指令總集成: SCAPIN第2卷』, エムテイ出版.

40) 樋口雄一(2014), pp. 91-95.

41) 井上学(2013), 「1945年10月10日 '政治犯釈放'」 『三田学会雑誌』105卷4号, pp. 249-251.

42) 李康勳(1987), pp. 243-244.

마련한 자립회관에 모였고 이 때문에 그곳이 일본공산당 재건의 본부가 되었다”고 회고했다.⁴³⁾ 이와 함께 사상범의 출옥을 계기로 재일한인 사회에서는 대대적으로 「친일파」 척결 움직임이 일어났다. 일찍이 10월 12일 조련 도쿄지부 결성대회에서 다카야마 고(高山光)라고 하는 이름의 한인 간부가 과거 「일심회(一心會)」에 가담한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청년 운동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⁴⁴⁾

10월 15일부터 이틀간 도쿄에서 열린 조련 전국대회에서도 비슷한 사태가 벌어졌다. 둘째 날 등사본 『민중신문』 창간호가 대회장(兩國公회당)에 산포되었다. 이 자료는 앞면에 「재일본조선인연맹 창립전국대회에 一言함」이라는 제목의 논설을 실었는데, 여기에서 새로운 조직으로부터 과거 「조국의 반역자와 전쟁범죄자」들을 구축해 갈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앞면 하단부에 대표적인 친일단체로 「일심회」를 거론하고 그 임원으로 권일 · 이능상 · 주기영 · 강경옥 · 김광순 등의 이름을 거론했다. 이날 대회장 4층에서 권일 등에 대해서 청년 행동대원들이 폭행을 가했다. 이러한 폭력 행위는 조득성과 이강훈의 만류에 의해 중지되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친일분자로 이름이 거론된 자들이 조련에서 제명되었고 준비위원장 조득성과 함께 우파 정치범이었던 이강훈도 조련과 거리를 두고 활동하기 시작했다.⁴⁵⁾

사상범들이 도쿄에서 일제히 석방될 때 일왕 암살의 혐의로 2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던 박열(朴烈)은 여전히 아키타(秋田) 형무소에 머물러 있었다. 「인권지령」이 발표된 직후, 재일한인 아나키스트 한현상(韓暉相)은 도쿄에서 아키타(秋田)를 찾아가 박열과 20년 만에 해후했다. 한현상은 면회 후 도쿄로 돌아오자마자 10월 15일 조련전국대회 첫날 히비야(日比谷)공회당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하여 박열의 수감 상황을 전했다.⁴⁶⁾ 첫날 집회를 마치고 수많은 재일한인 참가자들이 가두시위를 전개하는 가운데 준비위원장 조득성은 김천해와 이강훈을 데리고 사법성 건물을 방문하여 박열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때 조득성은 위원장 직책을 사용했으며 김천해와 이강훈은 부위원장 직책을 각각 사용했다. 아직 위원장이 정식으로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준비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0월 10일에 출옥해 나온 두 사람을 부위원장으로 한 것이다.⁴⁷⁾

43) 『エコノミスト』 43卷47号(1965年11月2日). p. 83.

44) 『민중신문』창간호(1945년10월15일).

45) 權逸(1987), pp. 100-102.

46) 小松隆二(1986), 「在日朝鮮人の軌跡：65年の在日生活の聞き書き」 『三田学会雑誌』 78卷6号, pp. 84-85.

조련 전국대회에서는 둘째 날 10월 17일에 김정홍 등의 임원 선고위원들이 새로운 위원장으로 윤근을 선출했고 부위원장으로 김정홍(金正洪)과 김민화(金民化)를 선출했다. 그리고 중앙위원 72명이 임명 가결되었다. 그날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긴 시간에 걸쳐 제1회 중앙위원회가 도쿄의 흥생회관(興生會館)에서 열렸다. 첫 중앙위원회는 조국의 통일정부수립촉진을 위해 대동단결할 것, 조련을 대내외적으로 재일동포의 공적 기관으로 인정할 것, 재일한국인의 귀환원호대책을 위해 시모노세키·센자키·하카타에 출장소를 개설할 것, 귀환 노동자의 귀환여비와 식량 그리고 미지급 임금을 요구할 것, 외국인으로서 主食·담배·술 등의 특별배급을 요구할 것, 반민족적 행위를 범한 자들을 조사하여 조직에서 제명할 것, 등을 결정했다.⁴⁸⁾

3. 재일한인 민족주의적 청년단체의 결성

해방직후 재일한인 사회에서 사회주의적 성향을 지닌 조련이 전국적인 단체로 규합되는 한편,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청년단체가 상대적으로 미력한 상태에서 조직되어 점차 세력을 키워갔다. 조련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서종실(徐鍾實)과 허운용(許雲龍)이 도쿄 주변에서 청년 동지들을 모으면서 우파적 성향의 청년단체 「조선건국촉진청년동맹」(건청)이 생겨났다. 허운용은 1991년 필자와의 대담에서 청년단체 결성의 계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자신은 1944년 봄 조반(常磐) 탄광의 피징용 조선인 노동자와 대화하는 중에 헌병대에 체포되어 고이야마(郡山) 헌병대 영창에서 해방을 맞았다. 해방 후 도쿄 조련 준비위원회 사무소 근처에 살고 있는 이원유(李元裕) 집에서 자주 청년들이 모임을 가졌는데, 1945년 10월 하순에 서종실, 허운용, 이원유, 전상호(全相浩), 김성환(金聖煥) 등이 청년단체 결성을 논의했다.” 이제까지 필자가 조사해 온 바에 따르면 「조선건국촉진청년동맹」이라는 단체명이 처음으로 사용된 자료는 11월 5일자로 배포된 「조선청년제군!」이란 제목의 격문이다. 격문은 등사판으로 인쇄되었으며 한자와 한글로 세련되지 못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대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⁴⁹⁾.

47) 吳圭祥(2009), pp. 12-13.

48) 朴慶植(1983), 『朝鮮問題資料叢書第9卷: 解放後の在日朝鮮人運動 I』三一書房, pp. 7-10; 張錠壽(1989), p. 137.

49) 1945년 12월 25일에 인쇄되고 26일에 발행된 건청 기관지 『青年』 창간호 서문에도 동일한 내용의 격문이 실렸다.

조선청년 제군, 전쟁은 끝났다. 세계가 용납치 못할 침략과 부정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우리 조선에게도 자유독립이 약속되었다. 참으로 통쾌하며 기쁨을 금할 수 없다. 조선청년 제군, 과거의 상처가 너무도 심하여 우리의 심신은 피곤해졌다. 문명국가 조선의 건설이란 참으로 다난하고 힘든 일이다. 순진 무구한 마음, 왕성한 의기, 불같은 정열, 이것이 청년의 생명이 아니냐. 우리는 성의를 다하고 열정을 다하여 일치단결하여 조국 조선의 건설에 돌진하자. 젊다는 것이 예지와 힘과 정열의 원천이요, 국가의 힘은 곧 청년의 힘이다. 조국의 현상은 참으로 열렬한 청년의 힘을 기대하고 있으며 청년의 분기 없이는 완전한 건국은 없다. 보라! 각국 청년의 활동을. 미국의 승리도 그 쾌활한 젊은 힘의 결정이 아닌가. 천신만고 형극의 길일지언정 청년 대국이 가는 길에는 백화난만하고 명량한 춘풍이 불 것이다. 제군, 우리의 일을 우리가 하지 않고,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쫓기하라. 단결하자. 檀紀 4278년 11월 5일 朝鮮建國促進青年同盟

건청 조직을 주도한 청년들은 조련의 「규약」을 본떠서 32개조에 달하는 「규약」을 마련하고 결성대회를 준비했다. 이들은 11월 16일 히비야 공회당 근처의 비행회관(飛行會館)에서 「애국투사 출옥환영 연설회」를 겸하여 청년단체 결성대회를 열었다. 이때 청년단체가 상정한 「애국투사」는 이강훈과 박열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강훈은 이 대회에서 과거 12년간에 걸친 옥중체험담을 술회하여 참가자들을 열광시켰다. 반면에 박열은 직접 참가하지 못하고 축하 서한을 보냈는데, 이 서한을 이해룡(李海龍)이 대독하면서 장내를 열기로 가득 채웠다.⁵⁰⁾

건청은 조직결성 직후 사무실 확보에 나섰다. 11월 24일 허운용 등 건청 임원 3명이 비행회관 근처의 조선총독부 도쿄출장소 건물을 방문하여 사무실 제공을 요구했다.⁵¹⁾ 아울러 11월 29일에는 조련의 청년단원들이 건청이 임시로 사용하고 있던 옛 일본헌병대 도쿄분소 건물에 난입하면서 또 다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⁵²⁾ 그 후 양 조직 사이에 자주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1946년에 들어서 건청은 재일한인 사회에서 신탁통치 반대를 가장 큰 이유로 하여 반공적 이념적인 대립을 주도해 갔다.

재일한인의 민족단체 결성문제에 대하여 최근 연구에서는 정영환(鄭榮桓)의 2013년 연구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청년단체 또는 자치대의 조직과 활동을 규명하려고 하는 시도가 괄목할 만한 특징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련, 건청, 민단과 같은 거대 중앙 조직에 대해서

50) 『青年』 창간호(1945), pp. 7-8.

51) 坪井豊吉(1975), 『在日本同胞の動き』, 自由生活社, p. 261.

52) 權逸(1989), pp. 103-104.

는 어느 정도 일차적 자료들이 발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계에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은 산하 조직이나 지방 조직에 관한 자료의 발굴과 연구조사가 앞으로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필자는 특히 민족단체의 지방적 특징을 규명해 가는 일이 당면한 연구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는 재일한인의 민족단체에 관한 일차적 자료 가운데 대부분이 1946년 이후에 나온 중앙조직의 자료들이다. 그러다보니 지나치게 좌우대립 양상이 부각되고 조직의 이념적 성격이 분명하게 묘사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해방직후 그 중에도 1945년에는 각 지방별로 각기 다른 조건과 성격을 가지고 민족단체가 결성되어 서로 달리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제국주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한인들이 자신의 현실적 조건과 지역성에 따라 각자 독특한 형태의 조직 활동을 시작했을 것으로 보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사실(史實)들을 규명해 가야 한다는 것이다.

IV. 맺음말

이상으로 해방 이후 1945년 말까지의 시기를 중심으로 하여 재일한인 사회의 귀환 움직임과 민족단체 결성 움직임을 사료에 입각하여 소개했다. 이와 함께 해방직후 재일한인의 집단적 움직임에 관한 중요한 사료와 연구 성과들을 소개했다. 또한 필자의 최근 연구동향을 소개하고 주목할 만한 연구동향과 앞으로의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국의 역사학 연구자들이 해방직후 재일한인 사회에 관한 기존 연구 성과를 이해하고 향후 과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이 발표문을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해방직후 재일한인의 전반적 의식을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오늘날 해방직후를 기억하고 있는 재일한인 1세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에게서 구술자료를 얻어내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1988년에 민단 청년회가 재일한인 1세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분석결과를 발표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자료로서 활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설문조사 결과는 1982년 10월부터 1983년 1월에 걸쳐 일본각지의 한인 1세 4,205명에게 설문조사표를 배부하고 그 중 1,106명으로부터 회답을 얻은 것이다.⁵³⁾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본패전과 조국해방을 맞는 기억으로, ① 「감격했다」(19.1%), ② 「기뻐다」(47.8%), ③ 「아무렇게도 생각지 않았다」(19.1%)라는 회답이 나왔다고 한

다. 그리고 회답자 전체의 67.5%가 「해방 후 귀국 의사가 있었다」라고 회답한 반면, 31.1%가 「귀국 의사가 없었다」라고 회답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가 1982년 당시의 재일한인 1세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이미 귀환해 간 140만 명의 ‘귀국의사’를 합산할 때 해방직후 재일한인의 90% 정도가 ‘귀환하고자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해방직후 재일한인의 귀환의식이 얼마나 강렬한 것이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⁵⁴⁾ 이처럼 강렬한 귀환의식은 조국건설을 둘러싼 이념적 대립의 점진적 확산과 함께 일본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생활권 확보에 매진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53) 在日本大韓民國青年會(1988), 『アボジ聞かせてあの日のことを: ‘我々の歴史を取り戻す運動’ 報告書』, 在日本大韓民國青年會中央本部.

54) 최영호(1995), pp. 146-147.

「일본 패전과 한국해방에 따른 재일한인의 선택」 토론문

김태기 (호남대)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선, 재일한인연구를 연구 성향에 따라 능동설(운동설)과 수동설로 분류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발표자에 의하면 민족단체나 개인을 상대로 연구하는 경우 능동설이 많다고 한다. 해방 후 민단이나 조련 등 단체 연구를 하는 경우 이러한 경향이 많다고 한다. 그리고 수동설의 경우 점령당국이나 일본정부의 정책에 관한 연구는 수동설이 많다고 한다.

이와 같은 분류 방법은 재일한인연구에 대한 연구자의 관점을 확인할 수 있고, 지금까지의 재일한인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앞으로 새로운 연구를 시도할 때, 객관적인 관점을 찾아가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단지, 연구 내용이 아니라, 연구대상에 따라 능동설과 수동설로 연구경향을 분류해 버리면, 또 다른 편견을 낳을 수 있다. 물론 연구 대상에 따라 특이한 '경향'은 나타날 수 있지만, 그걸로 연구자의 관점을 분류해 버리는 것 자체가 객관적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2번째 의미는 최근에 발표자가 확인한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규슈대학교 조선연구실의 모리타자료실에서 발견한 조련 관련 회보를 새롭게 공개하였다. 해방 직후 민족단체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연구의 3번째 의미는 최근의 재일한인의 귀환과 민족단체와 관련해 새로운 연구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지 이 연구는 점령군의 재일한인 귀환정책과 관련해 점령군의 Tokyo Conference 등의 자료 발굴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는데, 이것은 토론자의 과거의 선행연구에서 이미 소개한 것이다. 따라서 선행연구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두 번째, 건청 관계자인 허운용의 이력을 소개하는데 있어, 그의 인터뷰를 사실로 그대로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지면에 소개하는 것이 객관적일 것이다.

민중의 패전의식 농촌청년 大川竹雄의 전시와 전후

발표 : 남상호 (경기대) / 토론 : 김영숙 (아주대)

1. 머리말

한일 양국간 갈등의 주요문제는 역사인식으로, 일본의 전쟁인식, 식민지배인식이 항상 문제시 되어왔다. 미증유의 대충격이었던 패전 직후, 일본에서는 전쟁과 식민지배는 자신들에게 무엇이었는지, 패전에서 벗어나 신흥일본을 건설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패전’담론 공간이 형성되어갔다. 이 시기는 일본에서는 군국주의를 벗어나 새로운 가치체계, 내셔널 아이덴티티 구축해가는 과정이고, 전쟁인식·식민지 지배인식의 전후 원점이 되는 시기였다.

본 발표에서는 패전 후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구축해가는 과정을 일본의 한 개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전쟁·식민지, 천황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어 갔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한 개인이란 일본 群馬県 新田郡 木崎町の 赤堀(아카보리) 부락에 살았던 大川竹雄(오오카와 다케오, 1911-2002). 오오카와는 1911년 大川吉之助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부친 大川吉之助는 1915~1919년에 區長, 1921~1925년에 정의 등을 역임한 마을 유력자이며, 1923년 縣稅戶數割賦課額 순위는 木崎町 전체에서는 10위로, 마을 내 상층 재산가이기도 했다. 오오카와 집안의 소유면적은 산림을 포함해서 10町6反9畝로, 그 중 경영면적은 1935년 당시 3町5反 정도였고, 소작지는 2町2反 정도였다.

大川竹雄은 1928년 太田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농학교에 진학하여 장래 농림기사로서 월급 생활할 것을 꿈꿨다. 그러나 장남인 형이 병으로 자리에 누워있었고 1930년 결국 사망하게 되자 집안의 후계자로서 농업경영에 본격적으로 힘을 쏟게 되는데, 이때부터 갖가지 자기기록을 남겨놓고 있다. 이 기록을 통해 전시~전후시기의 특히 그의 농업관, 전쟁·식민지인식, 천황관 등의 연속성과 변화를 살피고자 한다.

2. 전시기의 농본주의·천황의식

오오카와 다케오의 1928년(18세) 기록을 보면 자기 마을의 소작문제, 정치와 사회문제에의 관심(정치가를 비판), 「제국국민」의 저급한 민도, 집안문제, 학교생활문제, 자기

자신의 극기문제, 오락(여가생활)등이 주된 관심이었다. 특히 마을의 소작쟁의 문제에 강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는 지주 측인 아버지를 대신해 지주회의나 재판소 조정회의에 자주 참가하고 있었다. 928년 1월 일기에는 소작쟁의 지도자인 스나가 코須永好에 대한 기록이 있다.

오카와는 1928년 3월 21일에는 「野田爭議」에 대한 기술이 있어 사회의 노동쟁이에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3월 22일에는 “수평사원(피차별민의 조직)의 비애, 그들도 이상한 사람들이 아는데, 오호 이 차별을 타파해야만 한다”라고 水平社員에 대한 인간적 동정심을 표출하고 있다. 또 ‘청년의 시대는 우리에게 도래했다’, ‘세상은 진보했습니다’라 하여 시대 변화에 둔감한 부친을 비판하고 있다. 이는 당시 ‘데모크라시’란 용어가 회자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표현들이라 할 수 있다.

오오카와는 ‘데모크라시: ① 정치적 데모크라시...민중정치, ② 사회적...기회균등, 계급세습타파, ③ 산업적...산업자치, 노동자 자경영, ④ 문화적...문화재민, ⑤ 국제적...민족자결’이라는 기술을 남겨놓아 데모크라시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음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소박한 생각을 갖고 있던 오카와가 농본주의에 접하게 되는 계기는 두 가지로 소작쟁의의 경험과 농민으로서의 자긍심 상실이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소작쟁의 경험은 그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지주 측인 그가 “소작지 회수 문제 지긋지긋하다”¹⁾라하고 있고, 소작 측에서도 “자신도 지금까지 소작문제로 지긋지긋하다”²⁾라고 하고 있듯이 소작쟁의의 대립 속에서 서로 인격이 파괴되는 쓰라림을 경험했다. 한편 그는 당시 “사회는 농민관은 천민관으로 농가에 시집오는 여자도 없다”³⁾는 인식을 갖게 되고 실제로 이농현상이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을 목도하게 된다. 이런 속에서 그는 뭔가 농민으로서 살아갈 자부심을 찾고자 농본주의에 접하게 된다.

그런데 오카와가 와고 츠네오의 사숙인 「瑞穂精舎」의 단기강습 참여 중에 농업의 의의에 대하여 가장 감명을 받은 것은 오리구치 시노부의 가르침이었다. 오리구치의 가르침

1) 『昭和十六年手帳』.

2) 위의 책.

3) 大川竹雄의 發言, 「純農家と職工農家の言い分を訊く座談會」 『家の光』 1939년 8월호.

은 다음과 같았다.

또 오카와 다케오大川竹雄가 믿고자 했던 천황은 신이라는 국체 관념에 대해서도 “미야다 모지와 국체의 본의에 대하여 논쟁함. 미야다는 천황은 반드시 완벽한 완성민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 등이 다수의견을 결정하여 재단을 얻는 것이 좋다고 말하였다”⁴⁾고 하듯 정착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국가와 직접적인 연이 없이 살아온 한 농민이 ‘농’의 의의를 천황과 전쟁에서 구하고, 거기에서 농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자 할 때 자연스럽게 일본 국가의 한 일원이라는 자각을 강하게 인식해 가게 되었다.

일본 민속에서 보면 천황은 신의 의지를 그대로 전하는 현인신이다. 천황의 선조가 일본국에 내려온 이유는 高天原의 신을 제사 지낼 때 필요한 곡물을 재배하기 위해서이다. 다시 말해 논밭을 만드는 것이 중심목적이었다. 정치의 근본은 여기에 있다. 즉 일본민족 원래의 사명은 곡식을 만들어 신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토지를 넓히고 전쟁을 하고 했다. 침략이 목적이 아니라 신의 말씀을 따르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농업을 융성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백성이 곡식을 만드는 것은 일본민족 처음부터의 대목적을 수행하는 것이다.⁵⁾

오카와는 이런 내용 자극 받아 ‘농민은 천황의 보배’란 메모를 자주 남기고 있다.⁶⁾ 이제 오카와는 자신의 직업인 농업에는 인간생명의 유지라는 인도상의 의의나 인간성 회복의 의의가 있다고 말하게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절대적 가치인 신에 봉사하는 것, 직접적으로는 천황에 봉사하는 것이라고 말하게 되었다. 자신의 직업을 천황과 결합시켜 자부심 높은 것으로 치부하기 위해서는 천황이 절대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오카와는 “천황은 신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일본국민이 아니다. 폐하는 신이기에 잘못이 없다. 잘못이 있다면 군축의 보살핌이 모자라는 것이다. 이론적이 아니고 과학적이지 않더라도(古事記, 日本書紀는 믿을 수 없다) 과학 이상의 것이 있다. 그것이 일본국체이다. 科學은 훌륭해도 생명에 관해서는 무지이다”⁷⁾라고 강변할 수밖에 없다.

4) 『昭和十六年日記』 一月十三日.

5) 折口信夫, 「民族生活史より見たる農民の位置」, 『百姓』 1933년 5월호.

6) 『農家經營改善簿』.

7) 『昭和十六年日記』 一月十三日.

3. 農道盡忠

오오카와 다케오大川竹雄는 농민으로서의 자기 존재 가치를 찾아 편력하는 과정에서 중일 전면전을 맞이하게 된다. 그는 이런 시대상황에 영향을 받으며 자기 나름의 농업·농민관을 정리하고 있다. 1938년에는,

농본주의의 근거: 1. 일본은 어느 시대 농업이 충실했는가, 그리고 그 시대의 국세 및 문화상황, 2. 상공업화는 국민정신의 연약화 초래, 3. 공업화의 한도, 매년 증가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가, 결국 상품을 외국에 팔고 식량을 산다. 영국식의 입국방식은 결국 멸망하는 것이 아닌가 (중략) 10. 기계문명의 정체와 도시문명의 정체에 대한 농본이론

余의 농본관(농업을 성대히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

1. 식량의 국내생산(제2의 강점)
2. 건실한 국민정신(일본정신)의 원천. (수신서의 실행자) 정직, 견인, 질소. 가토 간지加藤莞治 말하길 ‘천황의 근위병과 같다’
3. 인구증가의 원천(국력의 원천).
4. 건실한 인간을 상공업에 보낸다.
5. 국방적 필요(농인 없으면 식량, 강병, 말이 없다).
6. 해외발전 모두 농민뿐(日滿一體도 이민에 의함. 대륙건설의 근본이다)
7. 體位の 保持.

농...국방적, 식량, 공업원료, 정신⁸⁾

1939년에는,

농본국가의 필요성을 지향하고 더욱 농도에 정진하고자 한다. 소비절약, 생산력 확충도 농민생활을 국민이 배우면 해결된다. 만주이민문제의 필요, 농업이주자 이들이 진실로 그 토지를 영구히 지배할 수 있다. 혁명은 농인에 의해 행해진다. 해외발전도 농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민족발전의 방법으로서 이민은 고대 방식이지만 본질적인 근거이다. 농은 국가의 근본-민족적 신념, 농촌과 금후의 사변 농촌과 금번의 사변

1. 식량의 자급
2. 인구의 저수지...양질의 강병, 직공의 원천

8) 『昭和十三年・十四年手帳』.

3. 유축물 (군수)

4. 동아신질서의 건설...만주이민

비교. 영국...중공업만, 미국...중공업과 영리농업, 일본...농민적 농업과 중공업. 근대과학 산물의 고마움, 농민적 농업의 질소적인 인적요소 이번 사변에서 뼈 속 깊게 그 고마움을 느꼈다.⁹⁾

이런 내용들은 결국 일본국가를 받치고 있는 ‘농’(농민·농업·농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변하고 있는 것들인데, 중일전쟁에 영향 아래 ‘농’의 국방적 의의가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대 일본은 메이지유신으로부터 불과 50여년이 지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세계 5대 강국의 하나란 국제적 지위를 얻게 되면서 일본인들은 일등국이란 자부심을 갖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일본국민의 50%를 차지하는 농민은 급속한 근대화의 진행 속에서 일등국이란 자부심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회로부터 무시당하고, 이농현상과 농민 자신들조차 스스로를 비하하는 현실 속에서 일본 농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없었다. 게다가 1929년 세계 대공황으로 인해 농촌의 궁핍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바로 여기에 농본주의 고취자들의 언설이 농촌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기반이 있었다. 농촌의 현실에서 도피하지 않고 현실에 도전하여 농민의 자긍심을 구하고자 했던 일군의 농민들이 농본주의에 영향 받은 것은 당연할 것이다. 오카와 다케오가 주장하는 ‘農’의 의의는 그의 창조물이 아니다. 당시 농본주의 고취자들의 주장을 자기 나름대로 받아들인 결과물이었다.

오카와는 ‘農’의 의의를 중일전쟁 이전에는 생명의 유지, 인간성의 회복이나 최고의 가치인 신이나 천황에 대한 봉사 등의 ‘성스러운 의의’에서 찾았지만 중일전쟁 이후 전쟁이란 현실 속에서 새롭게 ‘국방적 의의’를 농민 자부심의 근거로 삼으려 하고 있다. 즉 전시 하에서는 農의 ‘성스러운 의의’에 ‘국방적 의의’가 첨가되는 특징이 보인다. 한마디로 「農道盡忠」이었다.

이런 ‘농’의 의의의 강조·자각은 “농본국가의 필요성을 각성하여 점점 더 농도에 정진하고자 한다”¹⁰⁾라 하듯 농도정진의 실천의지로 이어진다. 오카와에 있어서 농도정진의 실천이란 “먼저 수신제가하여 촌을 일으키고 그 연후에 국가에 봉사하고자 한다. 제1기

9) 『昭和十四年手帳』.

10) 『昭和十六年手帳』.

30세까지 면학수양에 중점을 두고, 제2기 40세까지 농업경영에 정진, 인격완성, 제3기 50세까지 산업조합 운영 등을 통해 향당을 위해 일함, 제4기 50세부터 농촌구제운동에, 학교 설립¹¹⁾으로 되어있듯 먼저 자기 면학·수양과 자기 농사일에 전심전력하는 것이었다.

이상과 같이 농의 의의 자각은 결국 세 가지 형태로 발전되어 가는데 첫째가 그런 농의 자부심에 걸 맞는 인간이 되고자 ‘수양’ ‘건강’ 등에 힘쓰게 됨을 알 수 있다. 둘째는 자기가 사는 향토에 대한 자각과 애정으로 연결되어 진다. 셋째는 농업전념과 농민운동에 대한 에너지로 나타난다. 나아가 국가의 토대인 농촌을 구제하고자 당시 국가 농촌정책에 관심을 갖고 활동해갔다.

1944년 오오카와의 수첩을 보면, 「天皇の百姓」(7월 5일)으로서, 「大聖戰 승리하는 년도」(12월26일)을 위해, 「증산의 악조건을 정신력으로 극복, 誠心の 싸움」(11월월24일)라고 식량증산에 매진해가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4. 패전직후의 오오카와 타케오

“거리를 오가는 사람도 적고, 논밭에서 일하는 사람 모습도 한동안 없구나. 道路を通る人も少なく田畑に働く人影当分の間なし”

이것은 1945년 8월15일 大川竹雄가 終戰의 방송을 듣고나서 일었던 복잡한 심경을 표현한 문장이다. 오오카와는 이러한 심경을 ‘패닉’혹은 ‘허탈’이란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지금까지 農의 의의를 ‘성스러운 의의’와 ‘국방적 의의’에서 구하고, 전쟁시대에 식량증산에 열심히 매진해왔던 그가 패전을 당하고, 더구나 전쟁목적이 부정되는 시대상황 속에서 허탈감을 느꼈을 것이다.

1945년 10월 17일, 無産党 세력이 木崎에서 농민조합을 건설하려는 대회에 오오카와도 참가하고 있다. 그 자리에서 오오카와는 대회장인 스나가 코須永好에게 질문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들이 과거에 그렇게 악죄를 지었던가. 적색 제국주의, 아메리카 제국주의를 용인할 때는 미소의 개”라고 하면서, 대동아전쟁은 적색 제국주의, 아메리카 제국주

11) 위의 책.

의와의 전쟁이었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또 “만주사변을 용인하는가”라고 須永好에게 질문하면서, ‘支那事變의 필연성, 大東亞戰의 통찰’을 피력하고, “눈을 크게 뜨고 부의 세계적 불평등을 직시하”로 하면서 전쟁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大東亞戰爭은 악의 전쟁이 아니고”, ‘敗戰의 근본원인’은, 단지 ‘食糧輸入政策’에 있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 비참한 戰話를 듣고 있으면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하여 오늘날의 패전을 초래하게 된 것에 죄송하다 생각한다”, “実行組合長으로서 식량증산을 위해 땀 흘리며 오로지 열심히 일해왔는데도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고, 「패전의 책임자」로서 반성하고 있다. 더욱이 “軍官 비판은 진실된 반성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엄격한 자기 자신의 반성을 시작하지 않으면 ‘진실된 패전’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패전인식을 갖고 있었기에 연합국의 점령정책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

“연합군의 식사는 호화판, 일본인의 식사는 ...”라는 표현부터 시작하여, 1946년 4월 26일

메모에는 “미국의 점령정책은 일본과멸 (신, 천황, 가족, 국어) . 민족정신의 중심..... 일본의 국어 폐지. 식민지, 국어 폐지하여 부흥한 국가 없다”라고 쓰고 있다.

패전을 당하고 나서 오오카와가 남긴 기록을 보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지금까지 農의 의의를 ‘성스러운 의의’와 ‘국방적 의의’에서 구하고, 전쟁시대에 식량증산에 열심히 매진해왔던 그가 패전을 당하고, 패전국으로서 전쟁목적이 부정되는 시대상황 속에서 참을 수 없는 허탈감이 표현되고 있다.

둘째, 패전 이후 천황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었다. 오오카와는 패전후 農의 의의를 ‘祖国日本の再興’·‘新日本建設’에 두고 있다. 전쟁시기와 마찬가지로 애국심이 넘쳐나는 農의 의의였다. 이런 의의를 신념을 한 그의 실제 행동을 보면, 패전으로 발생한 자존심의 상실을 당시 사회의 구호였던 평화국가, 문화국가 건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문화는 힘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농촌문화연구회를 조직 활동해간다. 더불어 패전 이전과 마찬가지로 각종의 생산활동을 해갔다.

그런데, 전시기에는 農의 의의는 천황에 대한 봉사와 결합되어 있었다. 그것이 1946년 12월 단계가 되면 農의 의의는 단지 ‘農은 人道이다’라고 쓰고 있다. 더불어 “인간에는 절대자가 없다. 일본의 천황폐하 조차 그렇다. 히틀러, 뭇솔리니도 스탈린도 그렇다. 和의

정신 이것이, 신의 절대에 근접하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라고 쓰고 있다. 전시기에는 천황은 절대적인 신이라는 신앙을 가지려 노력했던 오오카와가, 1946년 단계에서는 천황은 절대자가 아니다 라는 메모를 남기고 있다.

농의 의의에 있어서도 천황과의 연결성이 보여지지 않고, ‘天과 人道이다’라는 표현으로 대체되고, 1960년대에는 농의 의의는 자연환경보호와 연결되어간다.

「尚敗戦の思わざる苦杯を喫したる日本も漸く虚脱を脱し再建の反省の機いたらんとす。祖国日本の再興で期そう。しかも再起は農村の再建よりと未曾有の土地改革の断行を見んとす。小生も此の処に□□□思いを新たにすして報徳の道に邁進せんとす」

(1946年12月16日)

간신히 허탈을 벗어나 조국일본의 재흥을 기하고자 맹세했던 1946년 12월경, 오오카와의 수첩에 빈번히 등장하던 용어는, 新日本建設・農道精進・農村工業化, 農地改革, 農村文化, 農民組合・協同組合, 新党(社会党)과 階級闘争, 資本主義・社会主義・協同主義・共産主義・国際主義・国家主義, 소련의 실정, 民主主義, 天皇制 등등이었다.

이런 용어 하나하나가 大川竹雄에게, 또 그가 살고있던 지역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발표장의 발표에서 언급하기로 하고 본 발표문에서는, 오오카와의 농본주의, 전쟁, 천황인식의 전시기~패전후의 연속성과 변화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음을 밝힌다.

5. 맺음말

참고문헌

大川竹雄 個人文書.

『群馬縣史 資料編』.

『新田町誌 資料編 下』.

「민중의 패전의식/ 농촌청년 大川竹雄의 전시와 전후」 토론문

김영숙 (아주대)

1. 사료(大川竹雄의 자기 기록)

- 1) 사료에 관한 기본 설명
- 2) 사료 입수 경위
- 3) 사료의 가치

2. 大川竹雄의 가치관 형성

1) 大川竹雄의 인맥

본문 가운데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데(스나가 코須永好, 野田爭議 관련, 와고 츠네오의 사숙인 「瑞穂精舎」의 오리구치 시노부, 미야다 모지) 이러한 인물들은 오카와의 사상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당시의 농본운동과 오카와는 어떻게 관련되는가?

2) 당시의 여러 잡지와 大川竹雄

인용 잡지 내용을 그가 읽었는지?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3) 천황과 군에 대한 인식

당시의 우파 농본주의운동과 관련하여 어떤 인식을 갖게 되었는지?

4) 당시 농본주의 인식과의 차이

3. 전후 인식

- 1) 인식 변화의 계기
- 2) 전후 농업관

한일 양국의 한일회담 반대운동과 의의

발표 : 유지아 (경희대 한국현대사연구원) / 토론 : 이승희 (동국대)

1. 머리말

한일국교정상화교섭은 1951년부터 1965년까지 진행되었는데, 같은 시기 양국에서는 한일회담에 대한 반대운동도 진행되었다. 한국에서는 1964년 3월부터 학생 및 야당을 주체로 한 대규모 한일회담 반대운동이 전개되었다. 반대운동 초기에는 한일회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었지만, 6월에는 본격적인 반정부 운동으로 변화하였다. 즉, 한일회담 반대운동은 당시의 정치, 사회, 경제적 구조하에서 한국에 산적해 있던 다양한 요구가 표출된 공동투쟁이었으며, 이에 대해 계엄령을 발령하여 군대에 의한 진압을 감행한 6·3 사태가 일어나 한일회담은 중단되기도 하였다. 특히 김종필·오하라 메모와 같이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방식이 아니라 막후 교섭과 같은 한일 간의 밀실외교를 통해 한일회담이 추진되자, 국민들은 한일협정에 대한 요구사항을 언론을 통해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가 국민의 대표로서 한일협정을 준비하고 대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반면 일본에서의 한일회담 반대운동은 1960년의 안보투쟁을 배경으로 하여 1962년부터 63년 초까지를 ‘제1고조기’, 65년 한일조약조인 후부터 국회비준 저지를 목표로 한 ‘제2고조기’로 나눌 수 있다. 일본의 반대운동 세력은 동북아시아 군사동맹론, 조선남북통일저해론, 일본독점자본의 대한침략론을 핵심논리로 하고 있다. 일본대중의 한일조약에 대한 무관심속에서 혁신정치세력은 일본인의 평화의식이나 생활감각에 뿌리내리는 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일본의 반대운동은 조선총연을 중심으로 한 재일조선인, 朝日우호단체, 학생 및 지식인 등 다양한 입장에서 전개되었다.

기존의 한일회담 연구는 한일협정 체결과정의 국제정치적 배경, 한일 양국 정부의 입장, 협정의 내용과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사회사적인 시각에서 한일회담에 대한 당시 한국사회의 인식과 대응과정을 면밀히 고찰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사회사적인 시각에서는 주로 한일회담 반대운동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인데, 이 또한 사회운동의 흐름 속에서 야당과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한 반대운동의 논리를 살펴보는 데 그치고 있다.¹⁾ 일본의 한일회담 반대운동에 대해서는 일본 시민사회의 한일협정에

1) 박진희, 2006, “한일양국의 한일협정 반대운동 논리”, 『기억과 전망』 18호; 요시자와 후미토시, 2001, 「한국에서의 한일회담 반대운동의 전개」, 『한중인문학연구』 제6집.

대한 대응을 다룬 이원덕²⁾, 최종길³⁾, 임성모⁴⁾, 박정진⁵⁾의 연구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주로 일본의 한일회담 반대담론이 일본 지식인의 역사인식과 전쟁책임인식의 부재로 인해 한국의 반대세력과의 연대는 물론 운동 자체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일본내에서는 한일회담 전반에 대한 역사인식의 전개와 그 주장에 대해서는 요시자와 후미도시(吉澤文寿)⁶⁾와 다카사키 소지(高崎宗司)⁷⁾가 잘 정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일관계와 한일협정 체결에 대한 한일양국의 반대여론을 살펴보고 한일회담 반대운동이 가지는 의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따라서 신문기사에 나타난 한일회담에 대한 반응을 분석하여 한일협정 체결과 한일 양국 사회 여론과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평가하고, 이것이 결국 1960-70년대 한일관계 형성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2. 한국내 한일회담 반대여론

1961년 8월 중순 박정희의 미국방문이 거론되면서 한일국교정상화는 공식적인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정희는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에 연연하던 이승만 및 민주당 정부와는 달리, 미국 방문 길인 1961년 11월22일에 일본을 방문하여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총리를 만나 양국은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여 명량하고도 굳건한 토대위에서 긴밀한 제휴를 해나가야 한다”고 국교정상화의 의지를 솔직하고도 명백하게 천명하면서 협조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다음해에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일본의 오히라 마사요시

2) 이원덕, 1996, 『한일과거사 처리의 원점-일본의 전후처리 외교와 한일회담』 서울대학교 출판부/2005 『한일회담에 나타난 일본의 식민지배인식』 『한국사연구』 131.

3) 최종길, 2012, 「전학련과 진보적 지식인의 한반도 인식 : 한일회담 반대 투쟁을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35.

4) 임성모, 2011, 「냉전기 일본 진보파 지식인의 한국 인식 : 『세카이』의 북송·한일회담 보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33.

5) 박정진, 2010, 「북한과 일본혁신운동 - 일본 한일회담반대운동의 발생(1960~1962)」 『한림일본학』 17./李鍾元 他, 2011, 「日韓會談反對運動」 『歴史としての日韓国交正常化 I 東アジア冷戦編』 法政大学出版局.

6) 吉澤文寿, 2005, 『戦後日韓関係-国交正常化交渉をめくって』 クレイン.

7) 高崎宗司, 1996, 『検証 日韓関係』 岩波書店(新書).

(大平正芳) 외상 간에 협상내용에 합의하였다. 박정희의 이 같은 태도는 한반도에서 국민의 여론에 연연하지 않고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정부가 들어섰음을 알리는 것이었으며, 그것은 비록 "한-미-일 삼각관계"에서 최하위의 파트너이기는 하지만 동북아시아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전략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감당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었다. 또한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통합전략에 따라 진행된 당시의 한일회담은 1961년 6월에 진행된 케네디-이케다 회담에 이은 11월의 박정희-케네디 회담의 산물로 나타난 것으로서 단순히 한일 간의 현안문제가 아니라 한·미·일 3국간의 관계에서 의제에 오른 문제였다. 한일국교정상화가 미국에게는 군사 정치적 이유에서, 일본에게는 재계의 한국진출에 대한 요구라는 차원에서 얼마나 중요한 현안문제였는지를 여실히 보여 준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대일 협상 진행 과정을 비밀에 부쳐오던 박정희 정권의 민주공화당은 1964년 2월 22일 당론으로 확정된 한일 교섭안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일반 여론의 추세를 무시한 채 3억불의 청구권 보상 대신 평화선에 대한 협상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1964년 3월 5일 정부와 여당은 연석회의에서 한일회담의 타결·조인·비준을 5월까지 모두 마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야당인사 200여 명은 3월 9일 '대일굴욕외교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의장 윤보선)를 결성하여 구국선언을 채택하고 반대투쟁에 총력기할 것을 다짐한 후 전국 유세에 들어갔다. 학생들의 반대 시위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3월 24일 서울대 문리대, 고려대, 연세대 학생들이 5·16 군사쿠데타 이후 최초의 대규모 가두시위(3·24시위)를 벌였다. 1962년 한일회담이 급속히 추진될 당시 신문사에서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 한일국교정상화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볼 수 있다.

본사와 한국 통계센터가 실시한 전국여론조사에서 응답자(2,724명)의 17%는 한일관계에 있어 정식으로 국교를 맺을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나타냈으나 이의 약 2배에 가까운 32.3%는 국교수립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중략)

국교정상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54.8%의 879명 응답자에게 한일교섭에 있어서의 우리 측 입장을 물어본 결과는 ①우리가 내세운 조건을 약간 양보하더라도 속히 국교를 맺어야 한다는 의견에 찬동한 비율은 33.8%이며, ②우리가 내세운 조건을 양보하면서까지 국교를 맺을 필요는 없다는 의견에 찬동한 비율은 53.8%로 훨씬 많았다. 이밖에 ①'상호 협조적으로', '차차 두고 실정을 보아가며'라는 약간의 기타 견해도 있었다.(경향신문 62/05/17, 1)

위에서 살펴보면, 30% 이상이 한일 국교를 맺어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다지 높은 비율이라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찬성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조건을 양보하면서까지 국교수립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 58%를 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국민들의 의견은 정부가 추구하는 동북아 정세와 한국의 위상보다 대일감정과 일본에 대한 국가적인 이익을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당시 여론은 한일국교 정상화에 대해 크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한일회담의 추진과정에서 한국 측의 이해관계가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가에 맞추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62년 11월 12일 무상 3억, 유상 3억 달러로 대일청구권 문제를 낙찰시킨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오히라 일본 외상과의 비밀합의 내용을 담은 메모가 폭로되면서 정부의 한일회담 추진과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촉발되었다. 특히 1963년에 들어서서는 군정 연장반대와 한일회담 문제가 교착되면서 한일회담에 대한 입장은 재야 정치인사들을 통해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주요한 내용은 회담의 추진주체가 군사정부가 아닌 민간정부여야 한다는 점, 비밀외교의 방식은 국민에게 큰 해악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강조되었다. 또한 남은 현안인 평화선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경향신문 63/05/01. 1면; 동아일보 63/05/01. 1) 이 시기 한일회담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회담의 평등성 확보였으며, 한일 회담을 서두르지 말 것을 촉구하는 것이었고,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정부 독단의 회담 추진과정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었었다.(경향신문 63/07/22.). 반대운동의 논리 역시 기본적으로는 대일저자세 외교를 추궁하는 것이었고, 조기타결을 저지할 것과 김종필 의장의 한일회담 관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는 결국 비밀외교에 대한 비판이기도 했다.⁸⁾

결국 1963년에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한일회담 문제는 대통령 선거와 결부되면서 상대후보에 대한 폭로와 비방전에 가까운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는 주로 박정희 후보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났고, 박정희가 한일회담을 양보하는 대신 일본에서 정치자금 을 받았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졌고, 대일저자세 외교를 집중 비판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가 박정희의 승리로 끝나고, 미국은 본격적으로 한일회담 조기 타결을 촉구하기 시작하였고, 군정에서 민정으로 이양한 박정희 정부는 1964년 초 회담 타결을 서둘렀다. 정부의 정책에 반발한 학생들은 1964년 5월 20일에 ‘한일굴욕외교반대대학생총연합

8) 대학가를 중심으로 재야인사들의 강연회가 진행되고 한일회담반대운동이 대역투쟁의 양상을 보이게 되자 김종필은 직접 대학생과의 간담회를 주선하기도 했으며, 학생들에게 김오히라 메모를 공개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외교적 문제로 비화하며 정부의 외교적 무능을 비판하는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회'가 주최한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및 성토대회'를 개최하였고, 이로써 한국에서 한일 회담 반대운동이 다시 고양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대회에서 학생들은 "4월 항쟁의 참다운 가치성은 반외압세력, 반매관, 반봉건에 있으며 민족민주의 참된 길로 나가기 위한 도정이었다. 5·16 쿠데타는 이러한 민족민주 이념에 대한 도전이었으며 노골적인 대중 탄압의 시작"이라고 선언하였다. 또한 "오늘의 이 모든 혼란이 외세의존이 아닌 민족적 자립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다"고 말하면서 "민족적 긍지를 배반하고 일본 예속화를 촉진하는 굴욕적 한일회담의 즉각 중단을 엄숙히 요구한다"고 선언하였다.⁹⁾ 그리고 집회에서는 한일회담에 대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현 정부의 정통성도 비판하고 있다.

이 집회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에 대해 25일 전국 32개 대학의 총학생회 연합체인 한국학생총연합회가 주최하는 '난국태개 학생총궐기대회'를 열어 "조국의 주인이 누구요, 주권의 소재가 어디인데 민족의 절규와 감정을 외면한 채 민생고 해결에 완전 실패한 나머지 고갈된 국가경제 긴급 미봉책으로 신제국주의를 자초하는 반민족적 만행이 정치 귀족의 탁상에서 계속 강행되고 있지 않은가?"¹⁰⁾ 라고 말하고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계기로 하는 경제개발자금 도입을 서두르는 박정희 정권을 비판했다. 이 시위는 불발로 그쳤지만 27일 서울대에서는 긴급교수총회가 열려 "정부는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사태혼란의 근본원인을 직시하고, 과감하고 발본적인 시책을 단행하라"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와 같이 이시기 한국에서의 한일회담 반대운동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한 내정 전반에 대한 비판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6월 3일 학생데모는 전면적으로 확대되어 '한일회담 반대운동'에서 '박정희 하야'로 이행했다. 약 5만명의 시민과 학생이 국회의 사당으로 전진하자, 정부는 박정희 담화를 발표하여 계엄령을 선포하였으며, 한일회담은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에 한일회담문제는 야당 투쟁의 쟁점으로 부상하게 되었고, 야당과 재야세력을 중심으로 '대일굴욕외교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가 결성되면서 조직적인 반대운동으로 확산되었다. 반대의 논리는 1962년 말부터 제기되어오던 여론의 반영이었다.

그러나 한일회담 반대운동 후기인 1965년에는 한일회담 의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일기본조약, 청구권 및 경제협력, 어업, 법적지위협정 가조인 그리고 '기본조약 제2조'에

9) 「서울대학교 5·20 선언문」(6·3 동지회편, 1994, 『6·3 학생운동사』 편집위원회, p.471.)

10) 「난국태개 학생 총궐기대회 선언문」(앞의 책, 『6·3 학생운동사』 p.483-488.)

명시되어 있는 ‘한국병합’조약의 무효시점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한국은 한일간의 조문해석이 다른 점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명확하게 하면서 오로지 한국의 국익이라는 시점에서 반대론을 전개하였다. 때문에 한일조약에 대한 찬성과, 반대파 모두 반공의 입장에서 전개되는 경향이 짙었으며, 따라서 청구권이나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등에 관한 인권문제가 상대적으로 경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3. 일본내 한일회담 반대여론

한일회담에 대한 일본인들의 관심이 본격화된 것은 1960년대에 들어서였다. 1950년대에는 한일회담 교섭 중에 양국 간의 외교적 대립이 고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관심은 한국전쟁과 휴전 후 냉전체제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선을 선포하면서 일본정부와 여론은 ‘불법’, ‘부당’의 관점에서 한국을 비난하였으며, 따라서 일본사회에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심화되어 갔다.¹¹⁾ 그리고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한일회담에 대해서도 일본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는 분위기로 이어졌다. 구보타 발언으로 인해 한일회담이 결렬되었을 당시 일본사회의 여론을 살펴보면 이러한 분위기를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당시 아사히 신문에는 ‘한일회담 결렬의 원인’이라는 기사에서 “일한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것은 한국측의 예정된 계획인 것 같다. 한국측의 주장은 일본대표로부터 일본의 조선 통치는 나쁜 면 뿐만은 아니었다는 발언을 유도하였다”고 하는 일본 외무성의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¹²⁾ 또한 같은 날 ‘유감인 일한회담의 결렬’ 사설에서는 “정부성명처럼 한국측의 태도에는 사소한 발언을 일부러 왜곡하여 회담전반을 일방적으로 파괴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은 정말로 유감”¹³⁾이라고 하면서 이로 인해 어업문제의 해결이 늦어진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사회에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고착되어갔지만 한일회담의

11) 鄭大均, 1995, 『韓國のイメージ』中央公論社, p.71-81.

12) “日韓會談決裂の原因” 『朝日新聞』(1953년 10월 22일).

13) “遺憾な日韓會談の決裂” 『朝日新聞』(1953년 10월 22일).

타결이 임박한 1960년대에 들어가면서 한일회담에 대한 일본사회의 관심은 증대되었다. 특히 1962년에 경제협력방식의 도입으로 한일회담의 조기타결이 가시화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한일회담의 조기 타결을 지지하는 전형적인 논리는 1963년 1월에 『中央公論』에 실린 자민당 소속의 중의원 의원 가야 오키노리(賀屋興宣)의 글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는 한일회담의 반대론이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로 한일 간의 역사적·지리적 관계와 같은 자유진영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그리고 반대론에서 제기하는 박정희 정권의 정통성에 대해서 한국정부가 민주주의로 이행되어 가고 있으며, 합법정부로 승인 받았다고 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있다. 또한 한일회담이 남북통일을 방해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오히려 남북통일을 방해하는 것은 공산주의라고 서술하고 있으며, 한일회담이 군사동맹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반대론에 대해서도 북한이야말로 소련,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의 안정성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한일회담의 조기타결을 주장하였다.¹⁴⁾

이러한 과정에서 제3차 통일행동 재개의 배경은 한일회담을 둘러싼 정세의 급변을 들 수 있다. 1962년 10월 20일에 김종필이 일본에 건너가 21일에 오오히라 마사쿠니(大平正芳) 외상과 회담을 갖고 한일 간에 청구권문제의 정치적 타결에 관한 논의가 급진전되었던 것이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한일회담 반대를 위한 통일전선이 일본사회에 점차 정착되어가는 듯했다. 사회당은 11월 11일 사회당의 이오카(井岡) 국민운동위원회 사무국장 겸 총평의 이와이(岩井) 사무국장 등 ‘일한회담대책연락회의’의 단체대표와 협의한 결과 청구권문제의 비준저지에 중점을 두고 먼저 통상국회 소집 전후로 대대적인 대중운동을 조직하기로 결정하고, 한일회담반대 국민운동의 구체적인 진행방법에 대해서는 17일 중집위에서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¹⁵⁾ 사회당은 사회당, 총평 등 41개 단체로 구성된 ‘일한회담대책연락회의’를 강화하고 이 단체를 중심으로 폭넓은 국민운동을 발전시킬 생각이었다. 그러나 1963년 3월을 기점으로 국민회의의 한일회담반대운동이 급격하게 침체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본국내에서는 포라리스 원자력잠수함의 기항문제가 부상하여 5월 20일 제9차 통일행동 슬로건은 일한회담반대에서 ‘기항반대’로 바뀌었다. 당시 한국

14) 賀屋興宣, 1963, 「日韓交渉への私見」 『中央公論』, p.270-275.

15) “請求權の批准阻止 社党、日韓会谈反対運動” 『読売新聞』(1961년 11월 12일 日曜日 朝刊).

에서는 김종필이 중앙정보부장을 사임하고 한일회담은 제자리걸음 상태가 되어 일종의 낙관적인 관측이 다시 국민회의 안에 퍼졌던 것이다. 결국 국민회의는 1963년 9월 1일 제12차 통일행동을 끝으로 해체되었다.¹⁶⁾

이와 같이 국민회의의 해체에 의해 통일전선운동의 구심력이 약화되자, 일조협회는 8월 31일 제1회 상임이사회에서 ‘전조직이 단결하여 300만 서명을 획득하는 것이 시급한 현실’이라고 결의하였다. 사회당은 1964년 9월 3일 총평과 함께 원자력 잠수함기항저지 전국실행위원회를 결성하여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하였고, 공산당은 1964년 11월 제9회 당대회를 열어 안보조약의 고정기간이 종료하는 1970년이 초점이 될 것이라는 인식하에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전선을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한일회담반대투쟁은 수단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기본방침을 정했다. 이렇게 통일행동이 와해되는 가운데 1964년 12월 3일 제7차 한일회담이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1965년 2월 20일 한일기본관계조약안이 가조인될 때에는 사회당과 일본공산당은 단독행동으로 대응하게 되었다.

이 시기 한일회담 반대운동에 대한 논리적 전개를 이어 나간 단체는 일본조선연구소이다. 일본조선연구소는 1961년 5월에 발족한 박정희 정권이 10월부터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정권과의 한일교섭(제6차)을 재개하여 11월에는 방일을 하는 등 급하게 교섭을 진행하자, 62년 3월부터 60년 안보투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안보국민회의가 “일한회담분쇄”를 내걸고 운동을 진행하면서 발족되었다. 일본조선연구소는 한일회담을 일미신안보의 일환이라고 인식하면서 연구회나 서클이 아닌 상설 연구소를 만들어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제2의 안보”를 슬로건으로 하여 공산당 및 사회당, 총평이 연합하여 62년 10월부터 63년 3월까지 대중운동을 전개하였다가 다시 국민회의의 활동이 정체기로 접어들면서 그 활동을 활발하게 재개하게 되었다.

일본조선연구소에서 발행한 책자에서 한일회담에 대해 표현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한일회담이 위험한 군사동맹이며, 일본인의 사활문제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¹⁷⁾ 특히 설명의 방식에서 유럽의 NATO와 비교하면서 군사동맹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군대의 통수

16) 李鍾元 他, 2011, (박정진 「日韓會談反對運動」) p.275.

17) 寺尾五郎 編, 1963.1, 「それは危険な軍事同盟日本人の死活問題」 『私たちの生活と日韓會談』 朝鮮研究月報, 日本朝鮮研究所, p.3-15.

권·지휘권 문제, 병기·장비문제, 구성·훈련·작전방식을 들고 있다. 내용에서는 NATO동맹국들이 독립국인데 비해 아시아 군사동맹(NATO)국인 남한과 대만, 일본은 완전한 독립국이 아님을 지적하면서, 특히 “일본은 자위대의 통수권을 완전히 미국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종속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인 면에서는 한일경제협력이라든가 경제원조 등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명목으로 말하고 있지만 일본의 대자본이 노리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경제침략이며 경제지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일본의 대자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상품을 많이 수출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자본수출을 생각하고 있다. 즉 한국에 일본의 자본을 가지고 가서 투하한다. 공장을 건설하고 광산을 사서 점거하여 경영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불안정한 한국에 왜 자본을 투하하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에 대해 한국의 노동임금이 일본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이라는 극단의 저임금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일본의 노동자 계급은 춘계투쟁, 연말투쟁 등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이 적어지므로 별로 수입이 없는 일본의 공장을 합리적으로 폐쇄하고 한국에 공장을 세우면 값싼 노동력으로 돈을 벌수 있다는 논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¹⁸⁾ 이와 같이 대중의 생활과의 관련성을 역설하면서 한일교섭의 위험성을 역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같이 한일회담 반대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온 조선연구회에서는 한일회담 반대논리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전개하고 있다. 첫째는 아시아의 전쟁을 야기하는 군사동맹 차원에서의 반대이고, 둘째는 경제적인 면에서 일본의 자본진출로 인하여 일본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통일을 방해하고 베트남전쟁을 지속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군사제휴의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4. 한일양국의 한일회담 반대운동의 의의

한국에서 한일회담 반대운동의 의의는 박정희 정권에 대한 최초의 반정부운동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64년 5월 20일에 ‘한일굴욕외교반대대학생총연합회’가 주최한 ‘민

18) 寺尾五郎 編, 1963.1, p. 30-36.

족적 민주주의의 장례식 및 성토대회'로 인해 한일회담 반대운동이 다시 고양되어, 25일에는 한국학생총연합회가 주최하는 '난국타개 학생총궐기대회'로 이어지면서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계기로 하는 경제개발자금 도입을 서두르는 박정희 정권을 비판했다. 이와 같이 이시기 한국에서의 한일회담 반대운동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한 내정 전반에 대한 비판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6월 3일 학생데모는 전면적으로 확대되어 '한일회담 반대운동'에서 '박정권 하야'로 이행했다. 한국에서 한일회담 반대운동의 주장은 대체로 ①한국정부의 대일 저자세 비판, ② 평화선 사수, ③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한 경계, ④미국의 한일회담 개입에 대한 비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한일회담 반대논리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전개하고 있다. 첫째는 아시아의 전쟁을 야기하는 군사동맹 차원에서의 반대이고, 둘째는 경제적인 면에서 일본의 자본진출로 인하여 일본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통일을 방해하고 베트남전쟁을 지속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군사제휴의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일본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일회담 반대투쟁을 안보 반대투쟁의 연속으로 이해하면서,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 민주세력이 통일해야 하는 투쟁으로 전개되었다. 또한 미국에 대한 견제를 견고하게 함으로써 한일양국의 안보반대·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민의회의 공동투쟁의 과제로 삼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즉, 일본내 한일회담 반대담론은 미국과의 관계와 국제정세에서 일본이 처한 입장, 즉 군사동맹국으로의 편입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아시아의 냉전체제가 고착되어가는 시점에서 체결되는 조약이니만큼 일본으로서는 가장 우선해서 고려해야 할 사안이기도 했던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일 양국이 전개한 한일회담 반대논리는 각각의 국내 사정에 맞게 전개되어 보다 넓은 의미에서 한일양국 공동의 반대논리를 찾는 데는 실패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의 반대 운동에서 가장 큰 의의는 양국 국민이 자국의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운동과 같은 맥락에서 전개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앞서서도 서술한 것과 같이 한국에서 한일회담 반대운동의 의의는 박정희 정권에 대한 최초의 반정부운동이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직접적으로 한일국교정상화를 통한 아시아에서의 군사동맹을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4·19 혁명 정신을 들어 반외세, 반매관을 주장하면서 민주화의 퇴보를 우려하였다. 일본은 미일안보조약에 반대하는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고조된 한일회담 반대운동이었기 때문에 군사동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으나, 이러한 우려는 패전 후 일본의 민주화와 비군사화

정책이 역행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일 양국이 처한 국내적인 상황으로 보았을 때, 양국이 처한 가장 반민주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써 한일회담 반대운동을 전개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 중 ‘자주성’ 고취라는 면에서 한일 회담 반대운동 논리에서 미국의 한일회담 개입에 대한 비판은 양국이 공통으로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다.

두 번째 한일회담 반대운동의 의의로 들 수 있는 것은 한국에서 한일국교정상화로 인한 경제의 일본예속화가 아니라 ‘자주경제’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본에서는 한국 원조라는 명목으로 인한 공장시설의 이동은 일본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제정책이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준다는 논리와 맞물리고 있다는 점이다. 한일국교정상화를 통해 표면적으로 한국은 일본의 원조를 받아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실상은 새로운 경제적 예속임을 한국에서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경제적 진출을 명목으로 한 국내 노동자 탄압에 대한 정치임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한일회담 반대운동 이후 운동 주체의 내재적 문제로 가지고 있던 한계를 ‘한일회담 반대운동의 내재적 비판’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특히 하타다 다카시의 일본에서의 한일회담 반대운동에 대한 내재적 비판은 그가 일조우호운동의 거점이 된 일본조선연구소 활동을 통해 사회당, 총평, 공산당 등 기존 혁신 단체의 반대운동을 망라하여 내재적 비판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타다는 한일회담에 대한 대처에 기초해서 정리한 『日本人の朝鮮觀』에서 일본인의 조선문제에 인식의 부족함과 왜곡을 언급하는 내용을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 많은 일본인은 식민지주의를 긍정하지 않고 있다. 적어도 머릿속에서는 반대하고 있다. 아시아·아프리카의 식민지해방운동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거기에는 전전과는 전혀 다른 사상의 상황이 있다. 그러나 일단 조선문제가 되면 그 점이 이상해진다. 그것은 조선문제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일본인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조선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식민지주의에 반대하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일본 자신이 식민지 지배국이며, 일본인 자신이 식민지 지배민족이었다. 이 경우 식민지주의에 대한 반대는 자기부정을 하지 않고는 끝나지 않는다. 거기에서 혼란이 생긴 것이다. 일조문제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자주 말하지만, 그것은 식민지 지배국, 식민지 지배민족으로서의 일본 또는 일본인을 직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본인은 자국 군국주의의 아래서 고통을 받았던 희생자임과 동시에 식민지 지배민족이기도 하였다. 이 두 개의 성격을 보유한 자이다. 군국주의의 희생자였던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지배민족이었던 것은 좀처럼 알기 어렵다. 조선문제, 일조문제의 이해하기 어려운 근원이 거기에 있다.¹⁹⁾

즉, 일본인 자신이 식민지 지배민족이었다는 자각을 하지 못함으로써 조선문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쟁시기 가해자로서의 자기부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하타다는 후기에서 한일회담 반대운동의 한계에 대해 “무엇보다도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 사실 및 식민지 지배 책임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통감했다. 이것은 한일회담을 추진하는 측은 물론, 한일회담에 반대하는 측에게도 보여졌다”²⁰⁾고 말하고 있다. 또한 한일회담과 한일조약에 관한 일본인의 전반적인 관심 빈약, 조약에 대한 찬반이 현재·미래의 일본과 조선의 관계에 집중하고, 과거 일본의 조선 지배는 잇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 반대운동측은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측면에 대한 대처가 불충분했다는 점, 그 현상으로 구보타 발언과 ‘독립에 대한 축하금’으로서의 배상문제 처리에 대한 반대운동 세력으로부터의 비판이 부재했다는 점, 일본 민중도 또한 피해자라는 논리에 의해 한국에 대한 지원에 반대하려는 반대운동 논리 등이 비판적으로 지적되었다.²¹⁾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타다는 한일회담은 일본과 조선 사람들 사이에 수립되는 새로운 국제관계의 모체이기 때문에 일본과 조선이 우호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일본인 자신의 ‘탈식민지화’(decolonization)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일회담 반대운동의 내재적 비판을 통해 나타난 식민지 지배민족으로서의 자각은 이후 일본 사회운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식민지 문제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본에서의 한일회담 반대운동은 전후 일본의 식민지 지배책임론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면 조선인강제연행의 문제를 처음으로 정리한 박경식의 『조선인강제연행의 기록(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未來社, 1965年)는 한일회담이 강행되는 상황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그리고 『일본인의 조선관(日本人の朝鮮觀)』(旗田巍, 勁草書房, 1969年)도 한일회담에 대해 식민지 지배의 사실 및 식민지 지배의 책임에 대해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통감하면서 공간된 것이다. 처음으로 일본인의 입장에서 일본인의 손으로 조선근대사의 통사를 서술한 『조선근대사(朝鮮近代史)』(渡辺学編, 勁草書房, 1968年)를 준비한 것도 한일회담 반대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시작된

19) 旗田巍, 1969, 『日本人の朝鮮觀』, 勁草書房,

20) 앞의 책, p. 296.

21) 앞의 책, p. 96, 102.

것이다. 따라서 한일회담에 대한 반대운동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역사를 해명하고 역사적 책임을 둘러싼 논의를 진행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맺음말

한국에서 한일회담 반대운동의 주장은 대체로 ①한국정부의 대일 저자세 비판, ② 평화선 사수, ③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한 경계, ④미국의 한일회담 개입에 대한 비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일회담 반대논리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전개하고 있다. 첫째는 아시아의 전쟁을 야기하는 군사동맹 차원에서의 반대이고, 둘째는 경제적인 면에서 일본의 자본진출로 인하여 일본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통일을 방해하고 베트남전쟁을 지속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군사제휴의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한일 양국이 전개한 한일회담 반대논리는 각각 국내 사정에 맞게 전개되어 보다 넓은 의미에서 한일양국 공동의 반대논리를 찾는 데는 실패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의 반대 운동에서 가장 큰 의의는 양국 국민의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운동과 같은 맥락에서 전개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한일회담 반대운동의 의의로 들 수 있는 것은 한국에서 ‘자주경제’라고 표현되었던 부분이 일본에서도 또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제개념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한국은 일본의 원조를 받아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실상은 새로운 경제적 예측임을 한국에서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경제적 진출을 명목으로 한 국내 노동자 탄압에 대한 수순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일회담 반대운동의 내재적 비판을 통해 일본인 자신이 식민지 지배민족이었다는 자각을 하지 못함으로써 조선문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쟁시기 가해자로서의 자기부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이다. 이러한 자각은 이후 일본 사회운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식민지 문제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가야오키노리(賀屋興宣), 1963, 「日韓交渉への私見」『中央公論』.
- 다카사키 소지(高崎宗司), 1996, 『検証 日韓関係』岩波書店(新書).
- 박정진, 「북한과 일본혁신운동 - 일본 한일회담반대운동의 발생(1960~1962)」『한림일문학』 17, 2010.
- (朴正鎭), 「日韓会谈反对運動」『歴史としての日韓国交正常化 I 東アジア冷戦編』(李鍾元 他) 法政大学出版社, 2011.
-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저, 2005, 『해방후 한일관계의 쟁점과 전망』, 서울: 경인문화사
- 박진희, 2006, “한일양국의 한일협정 반대운동 논리”, 『기억과 전망』 18호
- 요시자와 후미토시(吉澤文寿), 『戦後日韓関係—国交正常化交渉をめくって』クレイン, 2005.
- , 2001, 「한국에서의 한일회담 반대운동의 전개」, 『한중인문학연구』 제6집.
- 6·3 동지회편, 1994, 『6·3 학생운동사』 편집위원회.
- 이원덕, 『한일과거사 처리의 원점-일본의 전후처리 외교와 한일회담』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 李鍾元 他, 2011, 「日韓会谈反对運動」『歴史としての日韓国交正常化 I 東アジア冷戦編』法政大学出版社.
- , 「한일회담에 나타난 일본의 식민지 지배인식」『한국사연구』 131, 2005.
- 임성모, 「냉전기 일본 진보파 지식인의 한국 인식 : 『세카이』의 북송·한일회담 보도를 중심으로」『동북아역사논총』 33, 2011.
- 정대균(鄭大均), 『韓国のイメージ』, 中央公論社, 1995.
- 최종길, 「전학련과 진보적 지식인의 한반도 인식 : 한일회담 반대 투쟁을 중심으로」『일본역사연구』 35, 2012.
- 하타다 다카시(旗田巍), 『日本人の朝鮮観』, 勁草書房, 1969.

「한일양국의 한일회담 반대운동과 의의」 토론문

이승희 (동국대)

■ 의의

유지아 선생님의 이번 발표는 2장과 3장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의 한일회담 반대 여론의 흐름을 명료하게 잘 정리해주셨고, 이를 통해 한일 양국에서 전개되었던 한일회담 반대운동의 의의 3가지를 제시해주셨습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반대운동의 의의를 국가별로 따로 다루어왔지만, 본 발표에서는 양국 공통의 의의를 도출해 내려고 했다는 점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질의

① 본 발표의 내용에는 한일회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재일코리안의 반대여론에 대해서는 누락되어 있습니다만, 한국과 일본의 반대여론과 함께 이를 함께 정리해주셨으면(장을 따로 만들지 않더라도 2장이나 3장에 보충해서) 보다 더 다양한 시각에서 반대여론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② 3장 마지막 부분(발표문 7쪽)에서 일본측 조선연구회의 한일회담 반대논리를 세 가지로 정리하시면서 첫째로 “아시아의 전쟁을 야기하는 군사동맹 차원에서의 반대”, 셋째로 “한국의 통일을 방해하고 베트남전쟁을 지속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군사제휴의 논리로 반대”라고 하셨지만, 이 두 가지는 서로 같은 의미로 이해됩니다만, 어떻게 다른 것이지요? 덧붙여 ‘군사동맹’과 ‘군사제휴’는 다른 의미로 사용하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③ 4장 앞 부분(발표문 7쪽)에서 한국에서의 한일회담 반대운동의 주장을 4가지로 요약하셨지만 “①한국정부의 대일 저자세 비판”과 “②평화선 사수”는 겹치는 내용으로 ①이 ②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④ 4장 중간 부분(발표문 8쪽)에서 발표자께서는 “한일 양국이 전개한 한일회담 반대 논리는 각각의 국내 사정에 맞게 전개되어 넓은 의미에서 한일양국 공동의 반대논리를 찾는 데는 실패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일 양국이 공동의 반대논리를 찾기 위한 시도 자체가 있었는지, 그러한 상황, 가능성이 존재했는지 의문입니다. ‘실패’, ‘한계’라는 평가 자체가 타당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